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

2021. 12.



목 차

I. 수립 개요	1
II. 2020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3
III. 세부 추진 과제	7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9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1
1-1-1.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13
1-1-2. 의약품 보장성 강화	18
1-1-3.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21
1-1-4. 한의약 보장성 강화	24
1-1-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26
1-1-6. 임·출산 및 어린이 의료비 부담 경감	30
1-1-7.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33
1-1-8. 비급여 관리 강화	36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39
1-2-1.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	41
1-2-2. 환자 중심의 협진 활성화	44
1-2-3.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의료 제공체계 구축	47
1-2-4. 거동불편 환자의 재택의료 활성화	49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53
1-3-1. 국가건강검진 효과성 제고 등	55

1-3-2.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강화	60
1-3-3. 교육·상담 활성화	63
1-3-4.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66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69
2-1. 의료 질 제고	71
2-1-1.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73
2-1-2. 질과 성과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79
2-1-3. 전자적 진료정보 교류 및 관리 강화	82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85
2-2-1.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87
2-2-2.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90
2-2-3.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94
2-2-4.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	98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103
3-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105
3-1-1. 재원조달 안정화	107
3-1-2. 보험재정 관리·운영 체계 개선	109
3-2. 의료이용 적정화	111
3-2-1.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113
3-2-2.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117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119
3-3-1.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121
3-3-2.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125
3-3-3. 약제비 적정 관리	129

3-3-4.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132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135
3-4-1. 합리적 이용 지원을 위한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	137
3-4-2.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141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145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147
4-1-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149
4-1-2.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	152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155
4-2-1.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자격기준 정비	157
4-2-2. 부담수준을 고려한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159
4-2-3.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관리 차별화	162
4-2-4.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165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169
4-3-1.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171
4-3-2.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	174
4-3-3.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177
4-3-4. 데이터 활용 고도화	179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183
4-4-1.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185
4-4-2.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반 구축	189
4-4-3. 건강보장 국제 공조 강화	192
IV.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195

I. 수립 개요

1 수립 개요

☐ 수립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 연도별 시행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2022년 시행계획 개요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19.5월)에 따라 4차년도 시행계획인 2022년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마련
-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23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반영 검토

2 추진 경과

-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수립('19.5월)
- ☐ 2019년 시행계획 수립('19.6월), 2020년 시행계획 수립('19.12월), 2021년 시행계획 수립('20.12월)
- ☐ 2022년 시행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1.12월)
- ☐ 2022년 시행계획 확정 및 국회보고('21.12월)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

건강수명 : '16년 73세 → '23년 75세

건강보험 보장률 : '16년 62.4% → '23년 70.0%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의 질 제고
-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 의료이용 적정화
-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공평한 보험료 부과제도 개편
-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 통계·정보 관리 강화
-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국민중심

가치기반

지속가능성

혁신지향

Ⅱ. 2020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요약)

□ 평가 배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202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바탕으로,
- 차기에 수립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

□ 총괄 평가

- 2020년도 건강보험 시행계획(4개 방향,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 추진과제)은 전반적으로 일정을 준수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상황 모니터링, ▲사업 추진체계 운영 등도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 전년도(2019년도) 평가 결과를 2020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일부 사업은 추진 일정이 조정되었으나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파악
- 향후 건강보험 제도 내적 문제점 및 외적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
 -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전체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성 강화 요구

□ (방향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추진 일정) 대체로 충실히 추진,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의료현장의 여건 변화, 유관단체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 과다 이용 우려, 지역간 갈등 문제가 제기된 ▲척추MRI, ▲심장 초음파 등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일정 연기,
'21년 예정이던 ▲눈 초음파 등은 국민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20.9월 조기 시행

- (성과) 제시된 성과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 보장을 개선 기대
 - 약제는 항암제·희귀질환에 대한 신규 등재를 지속하고, 기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로드맵에 따라 적절히 추진
 -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정책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20.12월)'을 수립·발표
 - 코로나19 발생으로 아동 및 산모 감염 방지를 위해 아동·분만 병원 1인실 기본 입원료 지원 등을 추진
 -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자 및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모니터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후 의료이용량·청구현황 등을 급여정보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

□ (방향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추진 일정) 추진 일정에 맞춰 최대한 실행, 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 간호인력 적정배치 시범사업 준비 등 일부 과제는 일정 지연
- (성과) 환자 중심의 평가 강화를 위해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실시
 - * 환자경험 평가 확대을 위한 개선점 제시, 중장기 발전방안 12개 과제 제시 등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완료
 - 응급실 안전관리 인력 배치를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보상체계 구축
 - 분만 수가 및 분만전후관리료 등 개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에 대한 가산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모니터링) 상대가치기획단·신포괄수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 시범사업은 해당 사업 운영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 등

□ (방향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추진 일정) 전반적으로 충실히 추진, 「공사보험연계법」은 국회 상임위 소관(복지부/정무위)이 쟁점이 되어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 상임위 소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연계 발의('21.9월)
- (성과) 정부지원금을 추가 확보(+5천억원, +0.3%p 인상), 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목표한 수준(3.2%) 내에서 적절히 관리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수가 조정, ▲중환자실 수가 개선, ▲진료정보의뢰 수가 차등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 시행
 - 요양병원 환자분류·수가체계 개편 단계적 시행,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전환 등 노인의료체계의 효율성·통합성 제고
- (모니터링)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부 - 건보공단 - 심평원으로 구성된 재정관리 TF 운영

□ (방향 4)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대비 강화

- (추진 일정)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절히 추진, 진료비 실태조사 법령 개정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 국제공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연수로 전환 추진
- (성과) 1단계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 및 2단계 개편 준비 실시
 - * 1단계 개편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 연구 실시 등
 - 주택임대소득(年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年수입 1천만원 초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20.11월)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한시적 경감 실시(30~50%, '20.3~5월)
- (모니터링) 부과체계 개편 효과분석 등을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등 실시

Ⅲ. 2022년 시행계획 세부 추진 과제

□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4개 추진방향,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의 2022년 이행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 당시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제는 추진 일정 조정

추진 방향	추진 과제
Ⅰ.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①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8개 세부과제)
	②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4개 세부과제)
	③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4개 세부과제)
Ⅱ.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① 의료 질 제고 (3개 세부과제)
	②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4개 세부과제)
Ⅲ.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2개 세부과제)
	② 의료이용 적정화 (2개 세부과제)
	③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4개 세부과제)
	④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2개 세부과제)
Ⅳ.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① 공평한 보험료 부과 (2개 세부과제)
	②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4개 세부과제)
	③ 통계·정보 관리 강화 (4개 세부과제)
	④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3개 세부과제)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다소 불확실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선별급여”)
 - * 선별급여는 주기적 재평가(2~5년) 통해 급여·비급여 전환 또는 선별급여 유지 결정, 안전성·유효성 등 의료기술재평가 필요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NECA)에 의뢰
- (필수검사 비급여)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1년)
- (의학적 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 소모품(치료재료) 등을 점검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 추진
 -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재비급여(약 3,200개), 보험은 적용되나 기준, 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약 400개) 등 약 3,600개
- (상급병실 비급여) 국민 수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년)
 - 1인실은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적용 추진('20년)
- (보장성 모니터링 및 대응)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이용량, 청구경향 등 모니터링 강화
 - 비정상적 의료이용 경향 발견 시 신속 대응, 주요 분야별 향후 지출규모 예상 및 선제적 관리 등 체계적 대응

〈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

- ① (MRI) '19년(두경부, 복부, 흉부 등) → '21년(척추) → '22년(근골격계)
- ② (초음파) '19년(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 '20년(두경부) → '21년(흉부, 심장, 갑상선) → '22년(근골격계, 혈관)
- ③ (상급병실) '18년/'19년(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④ (등재비급여) '19년(응급실·중환자실 등) → '20년(드레싱류 등 치료재료) → '21년(척추질환) → '22년(근골격계·이비인후과질환 등)
- ⑤ (기준비급여) '19년(암환자, 뇌혈관 질환 등) → '20년(안과, 비뇨기과 등) → '21년(정신질환, 영유아질환 등) → '22년(통증, 재활, 관절질환 등)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 어려움, 의료계 협의, 의료 이용량 관리 등의 사유로 일부 일정 조정 추진 중

2. 추진 경과

- **(MRI·초음파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질병진단에 필수적인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
 - (MRI) 뇌·뇌혈관('18.10월), 두경부('19.5월), 복부·흉부('19.11월) MRI 급여화 완료 및 척추 MRI 급여화 추진 중
 - (초음파)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남성생식기('19.9월), 여성생식기('20.2월), 눈('20.9월), 흉부('21.4월), 심장('21.9월) 초음파 급여화 완료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 중
- **(보장성 모니터링)** 불필요한 검사 및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하여 월별 모니터링* 실시, 이상 감지 시 급여기준 개선 등 조치 중
 - * 다양한 관점(보장성 강화 항목별·요양기관종별·상병별·환자특성별)으로 수진자 수, 의료이용량, 이용금액,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이 분석

< 모니터링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사례 >

- ◆ **(뇌 MRI 급여기준 개선, '20.4월)** 두통, 어지럼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7개 항목) 실시 후 이상 증상이 있거나 뇌 질환이 강력 의심되는 경우에만 필수급여(본인 부담 30~60%) 적용
 - 그 외 일반적 두통·어지럼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적용, 복합촬영은 최대 3촬영(200%)까지만 산정(기존에는 최대 5촬영(300%)까지 인정)

- **(상급병실 급여화)** 상급병실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완료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18.7월), 병원(의과·한방) 2·3인실('19.7월)
- **(등재·기준비급여)** 사회적 요구도가 큰 필수적 의료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급여 기준 확대 완료
 - 신경인지검사, 수면장애검사, 인공피부,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 총 1,297개 항목 급여화 및 기준 확대('21.12월 기준)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정책 평가) 지난 4년간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소요 도출('22년上)
 - ※ 평가 결과에 따라 '22년 추진 예정인 급여화 일정의 조정 가능
 - 급여화 과정의 경험 및 사후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수요자·공급자·보험자 측면에서 4년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추진**
 -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선별급여 제도(재평가 포함) 정비 모색**
- (MRI·초음파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른 '22년도 주요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 척추 MRI, 두정부 초음파 및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혈관 등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연중)
 - * 불필요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병행 추진
 - **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하여 수가 수준 논의

< MRI·초음파 급여화 추진 계획 >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등 초음파 급여화 관련 학회 등 의견 수렴	·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비급여 의료행위, 치료재료 중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확대 추진
 - (등재비급여) 근골격계·이비인후과질환 분야 등 급여화 추진(연중)
 - * 근골격계 통증 치료, 비디오전기안전검사 등 이비인후과질환 진단·치료 행위 등 검토
 - (기준비급여) 재활치료, 통증치료, 근골격계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연중)
 - * 동종건 및 인조뼈 치료재료,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등 검토

<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 >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비인후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 근골격계질환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 재활치료 및 통증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건강보험 적용 · 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 근골격계질환 급여기준 확대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모니터링 및 관리) 급여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추진(연중)

* 매월 의료기관 종별로 이용량 확인을 통해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급여기준 개선 등 조치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3월) - 근골격계 MRI 협의체 운영(3월) - 근골격계 초음파 협의체 운영(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6월) - 재활치료 및 통증치료 분야 급여기준 확대 방안 마련(6월) - 이비인후과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6월) - 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적용 방안 마련(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MRI 건강보험 적용(12월) - 근골격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2월) - 근골격계질환 치료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12월) - 근골격계질환 급여기준 확대 방안 마련(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협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기대효과

- 필수 의료 분야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접근성 향상 도모
 -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MRI·초음파) 분야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조기 질병 발견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및 필수 치료 분야 급여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보험 체감도 향상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담당자	노정훈 과 장 강민구 사무관 최단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70 044-202-2661 044-202-2667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약품의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
- (등재비급여)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 (희귀질환치료제 등) 허가-평가 연계제도¹⁾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 추진
 - * 희귀의약품의 경우 '16년부터 적용 가능하나 실제 신청한 사례는 없음
 -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추진
-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단계적 적용 추진
 - 우선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 적용
 - * 본인부담율 30%(암 5%, 희귀질환 10%) → 본인부담율 50, 80%(암·희귀질환 30, 50%)
 -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추어 추진하되, 항암제는 '20년, 일반약제는 '22년까지 단계적 검토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안)

구분	주요 분야 및 대상	예시
2019	중증질환, 항암요법(기타 암)	류마티스질환치료제, 뇌전증치료제 등
2020	근골격·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	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	만성질환	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 추진 일정 및 분야 등은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 가능

1) 제약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전에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2. 추진 경과

- (등재비급여)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164항목(항암제 52품목, 일반약제 112품목) 신규 보험 급여 등재('18.1월~'21.12.)
 - (항암제) 티센트릭주(면역항암제, '18.1월), 키프롤리스(다발골수종, '18.2월), 카보메텍스(신세포암, '19.2월), 임핀지주(면역항암제, '20.4월), 루타테라주(신경내분비암, '21.3월), 여보이주(면역항암제, '21.9월) 등
 - (일반신약) 마비렛(C형간염, '18.6월), 스피라자(척수성근위축증, '19.4월), 듀피젠트(중증아토피피부염, '20.1월), 험리브라(혈우병, '20.5월), 마벤클라드정(다발성경화증, '20.8월), 벤리스타주(전신홍반루푸스, '21.2월), 울토미리스주(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21.6월) 등
- (기준비급여) 의약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140항목(항암제 20항목, 일반약제 120항목) 급여 기준 확대('18.1월~'21.12월)
 - 임브루비카(만성림프구성백혈병, '18.4월), 퍼제타(유방암, '19.5월), 넥사바(간세포성암, '20.1월), 블린사이토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20.4월), 베노웨림(철분주사제, '20.5월), 피브로가민피(혈액응고인자 '21.3월) 등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등재비급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 지속 검토

<연도별 의약품 등재 현황(단위: 개, 고시일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48	9,222	2,826	1,801	1,743	3,947	3,738	982
신약	42	66	50	72	47	25	41	49
신약 외	1,906	9,156	2,776	1,729	1,696	3,922	3,697	933

* 최소단위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로 약제급여목록 개정('15.12)

-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 개편 방안 지속 검토

- (기준비급여) 기존 급여화 로드맵에 따라 안·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 검토

-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등재비급여) 신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계속) - (기준비급여) 안·이비인후과질환 등(계속)
2/4분기	- (등재비급여) 신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계속) - (기준비급여) 안·이비인후과질환 등(계속)
3/4분기	- (등재비급여) 신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계속) - (기준비급여) 안·이비인후과질환 등(계속)
4/4분기	- (등재비급여) 신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계속) - (기준비급여) 안·이비인후과질환 등(계속)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 부담완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	양윤석 과 장 최경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50 044-202-2752
------	----------------	-----	--------------------	------	------------------------------

1. 과제 개요

- ('19년)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 확대
 -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적용
- ('20년 이후)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 강화 추진
 - 실태조사·연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연령 조정 등 검토

2. 추진 경과

- (계획 마련) 치과 보장성 강화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20년~)
 - * 취약계층 등 건강보장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감염관리 강화 등
 -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중장기 계획마련 연구용역('21.5~9월, 건보공단)
- (보장성 확대) 당초 계획에 따라 치과 분야 보장성 단계적 확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적용 시행('19.1월)
 - *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 치아의 치아우식증(충치)에 대해 적용
급여기준 개선안(충전기준 개선, 세부인정기준 마련) 고시 시행('20.5.1.)
 - 구순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19.3월)
 - 근관(신경)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20.11월)
 - * 근관와동형성, 근관장측정검사, 근관확대 급여 보장성 확대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보 적용('21.10월)
 -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 (시범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0.6월~),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21.5월~)
 - * 광주, 세종 초등학교 4학년 대상(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21.5~ , 3년 간)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 필요항목 중심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취약계층 보장) 선천성 악안면 기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 확대*('22년上)
 - * 임플란트 급여대상에 완전 무치악자 포함
 - (치아 보존) C형 근관 치료 난이도 고려한 수가 개선('22년上)
- (시범사업) 장애인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운영
 - (장애인)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1회), 구강건강관리 제공(연2회, 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 등)
 - * 부산·대구(남구)·제주시 소재 병·의원, 종합병원 치과의사 중 관련 교육 이수자('20.6월~)
 - (아동) 광주·세종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정기적 구강관리서비스 (구강검진·관리계획 수립·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 제공(~'24.4월)
- (모니터링) 그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개선방안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 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형 근관 수가개선 검토('21.1월) -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 확대('21.3월)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니터링(연중)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근관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소요재정 모니터링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수가 신설 필요 질환 검토('21.4월) - C형 근관 보장성 확대('21.5월)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니터링(연중)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수가 신설 필요질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21.7월)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니터링(연중)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및 근관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소요재정 모니터링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연중)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니터링(연중)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치과 분야 건강보험보장률 단계적 개선
-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박지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1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미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4
협조부서	구강정책과	담당자	변효순 과 장 김수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020 044-202-2843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최봉근 과 장 이효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280 044-202-3287

1. 과제 개요

- ('19년) 시범사업('17.2~) 결과를 반영해 **추나요법 등 급여화**
 - 연구 결과 및 한약 급여화 협의체 의견 수렴 등 토대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이해관계 단체 간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등 검토
- ('20년 이후)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필수 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추진
 -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 병행** 추진

2. 추진 경과

-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 시술에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19.4월)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20.11월~)
 - 시범기관 9,024개 중 약 30.8%(2,781개)에서 약 4만1천 건 진료, 약 2만4천 명 수진자 혜택('20.11~'21.10월 진료분 기준)
 -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제출서식 및 방법 개선*, ▲한약재 목록 재정비, ▲인증 원외탕전실 참여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21.6월, '21.12월)
 - * 불필요 정보란(팩스 등) 삭제, 한약사 서면청구 방안 마련, 급여 청구시 자료제출 까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동 등
- 한약제제 분업 실시 방안 연구('19년) 등 **한약제제 발전 방안** 모색
- **기준비급여 2항목**(온냉경락요법*, 자락관법**) 기준 확대 적용('21.12월)
 - *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20명→ 30명 **2-3주차 주3회→ 주4회까지 인정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보장성 강화)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한의약 분야 보장성 강화** 추진
 - 필수 항목, 한의 고유영역 중심으로 기준확대, 비급여 항목 등 개선 검토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검토
 - * 「첩약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21.8월~)
- (한약 제제) 현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한약 제제 처방 목록 재정비 검토(연중)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급여 한약제제 처방 목록 정비 필요성 검토 - 첩약 시범사업 지속 추진(연중)
2/4분기	- 첩약 시범사업 지속 추진(연중)
3/4분기	- 신규 기준확대 항목 검토 - 첩약 시범사업 지속 추진(연중)
4/4분기	- 첩약 시범사업 지속 추진(연중) - 첩약 시범사업 관련 유관단체 의견수렴 (4~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방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이용 선택권·접근성 확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	김우기 과 장 김민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80 044-202-2574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박지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1

1. 과제 개요

- (참여 확대)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 확보('23년 250만 입원환자(누적) 이용)
 - 환자 및 병동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 제시*('19년~)
 - * 급성기 모형 외에 만성기·회복기 등 다양한 모형 시범적용 및 검증 추진
 -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 추진*('19년~)
 - * 서울지역·상급종합 참여병동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
 - 간호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18.3월)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도입 검토('19년)
 - 3차 상대가치 개편(입원료)과 연계하여 본 사업 전환 추진('21년)
- (제도 안착)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19년),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보급('20년~) 등을 통해 보편적인 입원 모델로 정착
 - * 전체 병상 대비 참여비율, 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 평가
 -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홍보도 지속 강화('19년~, 계속)

2. 추진 경과

- (병상 확대) 지속적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소재 병원 참여 제한 완화(최대 2 → 4개 병동, '19년~) 등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
 - * 참여병상 수 : ('15) 7,443 → ('16) 18,646 → ('17) 26,381 → ('18) 37,288 → ('19) 49,067 → ('20) 57,321개 병상
 - 참여가 저조한 지역 내 의료기관 등 미참여 의료기관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제공('19년~)
 - 사업 승인(지정, 병동 추가) 후 미운영 기관 주기적 관리

- (제도개선) 지역별로 균형있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지방중소병원 특성*을 반영한 추가 모형^(가칭)회복기 모형)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수가 개발 등 추진방안 연구**
 - * 평균 입원 기간이 길고, 수술률이 낮고 의료적 필요도가 비교적 낮음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확대방안연구」('20.5~12월, 고려대)
- (인센티브) 입원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9년~)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20년~)
 - (성과평가) 사업 참여율, 간호인력 처우 개선, 고용형태, 배치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 (평가개선 사항) 참여율 지표 배점 상승('19년),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19년~) 환류 실적 평가 강화('20년), 부당·허위청구 환수금 발생 기관 감점 신설('20년)
 - ** (성과평가) '19년 395개 총 152억 원, '20년 476개 총 207억 원
 - (교육전담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80병상 이상 기관 중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이를 통한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인센티브 지원*
 - * '21년 89개소 40억원 인센티브 지급
- (사후관리)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병동 환경, 환자 안전관리 등 병동운영 미흡 사항 개선 및 자율적 개선 유도를 위한 실태 점검(건강보험공단) 및 기관 자율점검 실시
 - ※ (실태점검) 누적 149개소('21.12월말), (자율점검) 1분기 527개소, 2분기 412개소, 3분기 375개소
 - 재활병동의 환자 특성을 반영한 재활통합병동 「중증도·간호 필요도 평가도구 마련」('21.12월)
- (시설개선비) 서비스 제공 효율성 증대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 * ('15년~'17년) 50억원 → ('18년) 72억원 → ('19년) 76억원 → ('20년~'21년) 각 84억 원
 -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 병상 확대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병원 대상 병원당 시설개선비 지원 한도 확대*('21.3월)
 - * 지원 한도 (기존) 기관당 1~1.2억원 → (개선) 1.5억원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제도개선)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전면 확대(~'26년) 방안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22년上)하여 병상 확대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참여 병상 확대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4회, '21.8~10월), 정책 연구,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방안 마련
- (인센티브)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서비스 확산
 - (성과평가) 전향적 성과평가로 전환 및 평가지침 개선으로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 마련('22년下)
 -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 확대('22년下)
 - * 교육운영 효과성 평가, 운영 성과 등 반영한 개선방안 검토
- (사후관리) 간호간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 모니터링(수시)
 - (안내) 실태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피드백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병동 적정 운영 유도
 - (실태점검) 입원료 산정기준(배치기준, 야간전담 등) 적정 운영 여부 점검
 - (만족도 조사)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연중)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현황 점검(1~12월) - '21년도 성과평가 사업설명회(~3월) - '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선정(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담간호사 현장 의견수렴(4~6월) - '21년도 성과평가 자료수집(5~6월) - 제공기관 이용자 모니터링(4~6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로드맵 마련(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 인센티브 신청(7월) - '21년도 성과평가 신뢰도 점검, 자문단회의(7~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병원을 위한 인력배치 기준 홍보 및 신청기관 심의·지정(10월) -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 인센티브 지급(11월) -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 통보 및 인센티브 지급(11월) - 제공기관 이용자 모니터링(10~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 확대를 통한 간병비 부담 완화
- 전문 간호인력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
- 성과평가 제도 내실화로 사업참여 확대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 유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담당자	양정석 과 장 김미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90 044-202-2696
------	----------------	-----	--------------------	------	------------------------------

1. 과제 개요

- (임·출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적용연령(현행 만 45세 미만)과 횟수 기준 등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카드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19년)
- (아동)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19년)하고, 아동 의료비 부담 추가 완화 검토·추진('20년~)
 - * 1세 미만 아동(21~42→5~20%),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10→5%) 등
- (중증소아)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19년)
 - *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 어린이 진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 개선('20년)

2. 추진 경과

- (임·출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적용('19.7월~)
 - * 적용연령(만45세) 폐지, 적용횟수 확대(시술별 2~3회 추가)
-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법령 개정('17.10월)
 - * (기존) 10~20% → (개선) 5%
-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고시 완료('19.1월)
 - * (기존) 21~42% → (개선) 5~20%
- (중증소아) 중증의 재택중인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재택의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간호·재활·교육·상담 등 지속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9.1월~)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실시('17.4월~), 어린이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추진('20.12~'21.8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임·출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확대*

* 국민행복카드 : (지원액) 일태아 60→100만원, 다태아 100→140만원
(지원기간) 1 → 2년, (사용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발전방향’ 연구 결과(‘20.12~’21.8월)를 바탕으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체계 개선 추진

- 단기적으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수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검토

- (중증소아) 참여기관 및 대상자 확대 등 개선사항 반영하여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22.1분기), 시범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지속 검토(수시)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어린이 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수가 개선 - (중증소아) 참여기관 추가 모집 및 사업 추진
2/4분기	- (어린이 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체계 개선 방안 검토 - (중증소아) 참여기관 추가 모집 및 사업 추진
3/4분기	- (어린이 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체계 개선 방안 검토 - (중증소아) 시범사업 운영 및 개선사항 검토
4/4분기	- (어린이 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체계 개선 방안 구체화 - (중증소아) 시범사업 운영 및 개선사항 반영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체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아동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중증 소아·청소년 대상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감소 및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044-202-2743
------	-------	-----	-------------------------------	------	--

1. 과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18.7월) 사항 반영 및 전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 등 형평성 제고('19년)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21~'22년)
 - * 상한제 재정 소요, 각 소득구간 별 상한액 수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비 부담 능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인 적용방안 연구('20년)
 - * 예> 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의 구분 적용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원효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득 수준 및 의료비 발생 규모별 지원 차등화, 상한조정 등 지원기준 정비('19년~)
 - 병원 환자지원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 (의료지원 체계) 각종 의료지원 현황, 비급여 규모 변화 등 감안, 의료비 지원사업 간 연계·통합방안 검토 연구('19년) 및 추진('20년~)
 - * 암환자·장애인·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 우선 검토
 - 비급여 중심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역할 정립, 법정본인부담 산정 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등과의 정합성 등 종합 검토

2. 추진 경과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9.1월)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20.1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외래 지원대상에 ‘중증화상질환’ 추가 및 의료비 부담수준 산정시 급여 인정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전액 확대(‘19.1월.)
 - 각종 의료비 지원 현황, 보장성 강화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개선방안 등 연구(‘19.4~10월)
 - * 보장성강화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 희소·긴급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추가(‘20.11월)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연계방안 연구(공단정책연구원, ‘20.12월)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21.1월 시행)
 - * 기초수급자·차상위 100 →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200 → 160만원
 - 의료비 지원비율, 지원한도 확대(‘21.11월 시행)
 - * (지원비율 확대) 기존 일괄 50% 지원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한도 확대) 기존 2천만원 → 3천만원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따른 소득판단기준 개선방안 검토(~’22년下)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변경(‘20.12월) 모니터링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22년下)에 따라 소득판단기준 개선 방안 검토(필요시 연구용역 진행)
 - ’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정산 및 사후환급 실시(8~9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비율 확대 시행(‘21.11월)에 따른 모니터링 등 현황 분석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가구원 기준개선 검토*(‘22년上)
 -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관련 복지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검토

- 재산기준 **현행화*** 방안 마련('22년上) 및 관련 고시 개정('22년下)

* 현행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 부동산 시세 등 현실 반영 필요에 따른 인상 검토(부과체계 2단계 개편('22.7월 시행)에 연계)

- (정책연구 추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완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통합적 관계 재설정 및 중장기적 목표, 추진방향 등 설정*

* 연구용역('22년下)을 거쳐 개선방안 검토 추진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변경 관련 모니터링(연중)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민간기관 지정('22.1월) - 보완적의료비 지원사업 통합적 관계 재설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22.3월~)
2/4분기	- 요양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22.5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 개선 검토('22.6월)
3/4분기	- '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정산 및 사후환급 실시('22.9월)
4/4분기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판단기준 개선 방안 검토('22.10월) - 재난적의료비 저소득층 지원비율 확대 시행('21.11월)에 따른 모니터링('22.11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제도 접근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포괄적 검토를 통한 보완적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 기반 구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박지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1
------	------------------	-----	--------------------	------	------------------------------

1. 과제 개요

- (관리 체계)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19년~)
 - * 현재 진료목적별, 세부 항목별로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20년)
- (정보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20년)
 - * ‘19년 330여개 항목 확대 이후 비급여 급여화와 연계해 항목 수 조정
 - ** 예>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 상병별·수술별 진료비용 총액 공개
-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 작성 등 강화된 절차 도입** 검토(‘21년)

2. 추진 경과

-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비급여 가격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 (‘13) 상급종합병원 → (‘14) 종합병원 이상 → (‘17) 병원급 이상 → **(‘21) 의원급 이상**
 - **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 고려
 - ‘18년 207항목 → ‘19년 340항목 → ‘20년 564항목 → **‘21년 616항목**
-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20.12월 의료법 개정)
-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 대책**」 수립(‘20.12월)
 - * (주요 과제) ①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②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③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④비급여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 비급여의 적정 이용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시행**(‘21.1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 (보고)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 시행*
- * 협의체(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 등 추진 예정
- 보고받은 정보를 검토·분석하여 국민·의료기관에 제공하여 비급여 적정 이용 및 제공 유도(연중)
- (표준화) ▲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 기존 미분류 비급여 분류 및 코드 부여 ▲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여건 조성
- (협의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운영 및 실무 분과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 이행 점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속 추진(연중)
- (서식 개선) 선택진료료 폐지, 제증명수수료 등 현행 제도 및 추가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영수증 서식 개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및 분과협의체 운영(계속)
2/4분기	- 비급여 분류 및 코드 표준화 추진
3/4분기	-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4/4분기	-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 영수증 서식 개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적정화 및 전반적 의료 질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강태수 사무관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4 044-202-2682
------	------------------	-----	-------------------------------	------	--

1-2.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가칭)이 환자별로 이송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 및 퇴원 이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관리
 -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기타 보건의료·복지 관련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
- (추진방안) 대상환자군 선정기준, 운영모델, 평가도구, 유형별 수가체계*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 도입('19년~)
 - * (유형 예시) 급성기(종합병원 등) - 회복기(재활의료기관) - 유지기(요양병원)
(수가체계 주요내용) 환자지원팀 구성·운영, 통합 환자평가, 지역사회 연계 관리 등 지원
 - 급성기 이후 회복기 단계에서 다양한 의료기관·질환별 특성을 감안,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차등화 검토('19년~)
 - * 현재는 급성기 15일, 요양병원 6개월 이후 체감제 적용하는 2개 유형만 운영

2. 추진 경과

- (급성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시행 및 참여 확대 (급성기 17개소, 재활의료기관 39개소, 요양병원 53개소)
 -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중심(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으로 '환자 지원팀'이 ▲통합평가·퇴원계획 수립 △회복기 기관과 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연계 지원
 - * 의료기관 간 질관리 및 보상체계 연구 추진('21년下)
- (회복기)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본사업 전환('20.3월)
 - * 급성기 치료 이후,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연계 체계 마련,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개선에 기여
 -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시행('20.3월~)으로 치료계획 수립 지원, 입원료 체감제 유예,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도입, 지역사회 연계수가 신설 등 집중재활치료 지원(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45개소)
 - * 사업 타당성 검증 및 3단계 수가 모델 마련 위한 성과평가 연구 수행('21년下)

- (유지기) 불필요한 입원,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 개편*('18.12월~'19.11월, 건정심 의결, 순차 시행)
 - *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조정(7개→5개) 및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 개선(중증↑, 경증·선택입원군 유지),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19.11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담당자 온라인 교육 도입('21.1월)
 -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기본교육 고도화 연구용역('21년 上)을 통해 퇴원 환자 지원제도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지원팀 전문성 향상 방법 모색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22년上)
 - 환자 특성 및 의료전달체계 고려한 급성기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추가 및 대상 질환 확대
 - * 중증 심뇌혈관 진료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추가, 중추신경계 뇌손상 등 확대 검토
 - 질 관리 보상체계 연구 결과 바탕으로 시범사업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수가 개선방안 마련
- (회복기) 재택복귀, 환자 기능 호전 정도, 입원일수 등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연계한 보상체계 마련('22년下)
 - * 중증환자 기피 방지 등을 위한 재활환자 분류체계 및 성과평가 세부기준 검토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지역사회연계 수가 시범 적용('20년~)을 통한 현황 분석 및 연계 기관 등 범위 설정
 -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중 기능 회복 및 보존이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
 - * 재활 대상 환자 선정,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보상체계 등 검토
- (유지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참여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지속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기)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기관 등 확대(1~3월) - (회복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및 모니터링(~3월) - (유지기) 퇴원환자지원제도 참여 현황분석 모니터링(~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기)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질 관리 보상체계 방안 등 시범사업 수가 검토(4~6월) - (회복기) 3단계 수가모형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6월) - (유지기) 퇴원환자지원제도 참여 현황분석 모니터링(~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기)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질 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수가 개선 추진(7~9월)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시행(7월~) - (유지기) 퇴원환자지원제도 참여 현황분석 모니터링(~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성기)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 질환 등 확대 검토(10~12월)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유지기) 퇴원환자지원제도 참여 현황분석 모니터링(~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료기관 퇴원 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정 의료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 확충 지원
-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활성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감소 효과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 조성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주관) (협조)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044-202-2732
------	----------------	---------------------	-------------------------------	------	--

1. 과제 개요

- (원격협진) 병·의원-대형병원 간 원격협진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인간 협진 플랫폼 구축(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 활용 검토)
 - 적정 플랫폼을 통한 협진 의뢰, 자문 제공 등에 건강보험 적용('19년~)
-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협진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높은 기관을 차등화 보상하는 수가 모형 시범 적용('19년~)

2. 추진 경과

- (원격협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인 간 원격 협진 비용을 보상하는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추진*('15.3월~'20.6월)
 - * '20년 6월 시범기관 현황 : 자문기관 12개소, 의뢰기관 76개소
 - 시범사업 평가 후, 원격협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가 체계 마련*('19.12월)·수가 적용('20.7.1.)
 - (연구용역 추진)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21.6월~'21.10월)
 - *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 마련 및 현장적합성 검토, 시스템 인증제 실행계획 수립 등
-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19.10월~'21.12월/70개 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기관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협의진료료 차등 지급
 - * 각 기관의 협진 과정 및 절차, 협진 기반, 협진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여 1~3등급 부여 / 3등급 수가는 병원급 기본진찰료 수준이며,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50%, 25% 가산
 - (실적) 협진 환자 7만여 명(명세서 21만여 건), 건보 53억원('19.10월~'21.5월)
 - (평가) 19개 다빈도 질환 분석시 기관등급과 치료기간·비용 간 상관관계 미흡하여 차등 협의진료료 모델 개선 필요('20.11월, 대구대)
 - 임상연구 결과, 요통(전체 협진 중 46.7%), 경추통(20.9%)에서 일반 치료 대비 협진치료의 효과성 확인(의·한협진 모니터링센터(부산대))

- (4단계 시범사업) 모델안 보완 및 임상연구 등을 위한, 4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보고('21.11월)

* 3등급 차등수가 대신 단일 수가 체계로 운영하되, 임상진료지침 등 협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소들을 수가 산정기준에 반영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원격협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 결과 반영하여, 원격협진 시스템 추가인정 여부 검토

* 현행 원격협의진찰료는 「응급전원협진망」, 「디지털의료지원서비스(DHI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산정 가능

- (의·한 협진) '의·한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 선정('22.3월),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및 사업실시('22년上~'24년)

- (협력 네트워크) 환자들이 지역 기관에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22년)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2년上 기관 선정 및 준비, '22년下 본격 시행)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 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협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 운영방안 마련 - (의·한 협진) '의한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 선정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협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 운영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개시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점검 및 현장방문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협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 운영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속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계약 및 준비기간 부여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협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 운영 및 수가 기준 개선방안 마련 -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지속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본격 시행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원격협진) 원격협진을 통해 불필요한 이송감소, 적절한 환자 전원, 전문적인 처치 등으로 안전한 환자 전원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한 협진) 국민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담당자	김우기 과 장 박승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80 044-202-2576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연희 과 장 이길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920 044-202-2926

1. 과제 개요

- (재활치료) 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단계별 조기 (집중)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 마련('20년)
 - 재활치료 대상 환자 분류, 단계별 기관 간 기능 정립 및 전문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방안을 포함한 관련 연구 병행 추진

2. 추진 경과

- (회복기 재활) 회복기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활의료 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17.10~'20.2월, 15개소)
 - *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모형 적정성 검토를 위한 '단계별·영역별 재활의료기관 확충 및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19년)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본사업 전환 및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시행('20.3월~, 45개소)
 - * '사업 타당성 검증 및 3단계 수가 모델 마련 위한 성과평가 연구' 실시('21년)
- (어린이 재활)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20.10월~, 7개소)
 - * 어린이 재활환자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평가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 및 적기 재활 지원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전달체계 구축) 재활의료 전달체계(급성기 - 회복기 - 유지기 기관)에 맞는 재활치료 및 연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기능 정립 및 전문화 위한 수가 개선 추진
 - (급성기 - 회복기) 전달체계 내 통합 환자 및 질 관리·보상체계를 지속 검토하고, 각 시범사업 내 대상 질환·입원 기준 확대 추진

○ (어린이 재활) 거주지 근처 병·의원에서 다수 환아가 의료혜택을 받으며 치료와 일상생활이 공유 가능한 환경 조성('22년上)

-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22년 2개소) 개원에 따른 시범사업 기관 확대 추진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 인력 및 환자 수 산출 등 지정기준, 연령별 수가 산정기준 등을 검토하여 외래 중심 진료 유도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전달체계 구축) 급성기-회복기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3월) - (어린이재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12월)
2/4분기	- (전달체계 구축) 급성기-회복기 시범사업 개선방안 검토(~6월) - (어린이재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12월)
3/4분기	- (전달체계 구축) 급성기-회복기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진검토(7월~) - (어린이재활)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12월)
4/4분기	-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12월) - (어린이재활) 시범사업 전·후 이용률 분석,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수가 적용 검토(~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재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치료와 일상생활의 공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
- 소아 등 재활 인프라 부족 영역에 대한 적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오창현 과 장 최세종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70 044-202-2474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최봉근 과 장 이효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280 044-202-3287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방문, 교육, 환자관리 등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수가체계 마련(법적근거 마련 '18.12월, 하위법령 개정 '19년~)
-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 대상으로 지역 중심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19년~)
- (재택의료) 재택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서비스 제공('20년)
 - * (구성) 의료인,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 장애인, 말기환자, 중증소아환자 등 중증거동불편자 대상으로 내실화

2. 추진 경과

- (방문진료)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중('19.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내용>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 (환자 유형) ①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 ②수술직후, ③말기질환, ④의료기기 등 부착, ⑤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욕창 및 궤양, ⑦정신과적 질환, ⑧인지장애 등

- “의과”에서 “한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실시('21.8월~)

-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21.9월)
 - 주치의 등록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 확대
- (호스피스·완화의료) 「암관리법」 제정으로 호스피스 법적근거 마련('03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호스피스 개념 확대 (가정형, 자문형 등 '17.8월)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년~)을 평가하여 본사업 전환, 수가 개선* 적용('20.9월) 모니터링
 - * 초기 환자평가계획 수립, 환자·가족에 대한 전화응대·상담 등 상시적 관리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통합환자관리료 신설, 1일 최대 방문횟수 제한(5회)
- (정신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21.6월) 및 시범사업 수행기관 추가 선정(8개소, '21.7월~)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추진
 - * 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면제 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사례관리 산정횟수 확대
- (중증소아) 중증의 재택중인 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19.1월~)
 - 중증소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정('21.1월)
 - * ▲환자관리료 산정횟수 상향(11→12회) ▲인력기준 완화 ▲30km 거리제한 삭제 등
-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진찰료 및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등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수가 모형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전화상담 진찰료 및 대리처방료('20.2월~)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및 환자관리료 등 재택치료 수가 적용('21.10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방문진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 실시(’22년上)하여 시범사업 연장 등 추진 방향 결정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청구현황 및 운영상황 분석 지속
- (장애인) 3단계 시범사업 평가 및 대안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대안적 지불모형 개발」(’21.11~’22.5월)
-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모니터링·개선점 검토
- (정신과) 시범사업 지속 추진 및 의료기관 관리체계 강화(퇴원 후 환자 관리 등)를 포함한 시범사업 개선·효과성 평가 추진 예정
- (중증소아) 참여기관 및 대상자 확대 등 개선사항 반영하여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연장 실시(지침개정, 참여기관 모집 등, ’22.1분기)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방문진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연구 실시(~6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청구현황 분석(매월) -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실시 - (정신과) 시범사업 참여 현황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검토
2/4분기	- (방문진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연구 실시(~6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청구현황 분석(매월) - (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6월) - (정신과) 시범사업 지침 개선 및 사업 수행기관 확대
3/4분기	- (방문진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검토(~9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청구현황 분석(매월) - (정신과) 시범사업 수가 개선방안 검토
4/4분기	- (방문진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지속 여부 검토 및 결정(~12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청구현황 분석(매월) - (정신과)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 검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지속적·장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환자의 만족도 제고
- 의료진의 재택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원으로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 도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왕진중증소아)	이중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장애인)	최봉근 과 장 이효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280 044-202-3287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호스피스)	이중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정신과)	김한숙 과 장 도혜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3860 044-202-3866

1-3.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1~25년)을 통해 보완
- (수검대상) 20~30대 피부양자(직장) 및 세대원(지역) 등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 해소('19년)
- (제도정비)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통해 의·과학적 근거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비 추진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18년~, 계속)
 - * 현재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총 17개) 별로 타당성 평가연구를 진행 중
- (사후관리)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확진자는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와 연계해 지속 관리되도록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실시('19년)
 - * 고혈압(심전도·나트륨·칼슘 검사 등), 당뇨(안저 등 합병증 검사) 등 대상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 검토('21년)
 - * 해외사례 조사, 개편방안 등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
- (재정운영)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별도 계리하여 예방·건강증진 분야에 포괄적으로 활용('20년)
 - *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2. 추진 경과

- (종합계획)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21.5월)
 - * ❶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❷ 믿을수 있는 건강검진 ❸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❹ 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 추진 전략 마련으로 예방적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제도정비) 검진항목·실시기준 정비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추진

- (검진제도 개선)

- 신생아(생후 14~35일) 검진 신설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 증가(7차→8차, '21.1월) 및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 및 주기 개선('21.4월)

* 전자미디어(1회→3회), 정서 및 사회성(1회→2회), 취학전 준비(1회→2회), 대소변가리기(1회→2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받을 수 있도록 수검 가능 기간 확대('21.1월)

* (변경전) 20,30,40,50,60,70세 1회→ (변경) 각 연령대별 10년 중 1회

-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 면제('21.1월)

*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 : 고혈압, 당뇨병

- (검진기관 질 관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실효성 제고

- 3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 및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21.9월), 미흡기관 사후관리 및 재평가 실시('21.11월~)

* 최우수기관 표기 공개, 차기 평가 면제 등 홍보

○ (사후관리 강화) 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대사증후군, 인지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건강상담 및 정보 제공

- (대사증후군 관리)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한 자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

*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 (검진바우처)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맞춤형 검진바우처' 지속 제공 및 검사항목 확대*('21.1월)

*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질검사 4종(1→2회), 당뇨병환자 당화혈색소(2→4회) 횟수 증가 및 요 일반검사 등 신설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거버넌스 개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조직 운영 효율화 및 국가 건강검진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조직·기능 정비('22년~)

* <사무국>범부처 협의조정 총괄 검진제도 개선 제안 접수 및 적정성 검토, <전문연구센터>검진 항목 근거연구, <성과모니터링센터>건강검진 성과 평가 및 분석 등 역할 세분화

- (제도 정비) 검진항목 정비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

- (검진항목)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질병청)'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검진위원회(필요시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검진항목 정비(연중)
- (구강검진) 수검자 만족도 제고 및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강검진 개선 방안 마련('22년下)
- (노인검진) 연령별 건강특성을 반영한 적정 평가도구 및 신체기능 및 생활습관 평가·상담 등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22년下)
- (학생검진체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22년下)
- * 교육부, 기재부와외의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생 검진정보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조정, 건보공단 위탁 등 논의('21.11월~'22년)

- (검진기관 질 관리) 수준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화* 및 4주기 검진기관 평가** 실시

* ①교육과정 확대, ②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③모바일 교육 기능개선

** 4주기 검진기관 평가(병원급 이상 '21.11월~ , 의원급 '22.5월~)

- (사후관리)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중증질환 이환을 예방하고 검진의 실효성 제고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22.1.~)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70%이하

-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 연계 등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 마련('22년下)
- (인지기능장애) 치매예방 및 치매 발생 고위험군의 치료 연계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정보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22.1.)
- (검진바우처)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된 바우처(시범사업) 본사업방안 검토('22년上)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개편(안) 마련 - 구강검진 제도 개선 TF 운영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인지기능장애 검사결과 치매안심센터 연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시행 - 4주기 검진기관(병원급) 평가 실시('21.11월~) - 노인건강검진 제도 개선안 마련 - 대사증후군 사후관리(연중) -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검진항목 타당성 검토(연중)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개편(안) 마련 - 구강검진 제도개선TF 운영 -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 주기 개선 시행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4주기 검진기관(의원급) 평가 실시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개편 사전준비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대사증후군 사후관리(연중) -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검진항목 타당성 검토(연중)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거버넌스 개편 사전준비 - 구강검진제도 개선(안) 마련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안) 마련 - 4주기 검진기관(병원급) 평가 중간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대사증후군 사후관리(연중) -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검진항목 타당성 검토(연중)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예방적 건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항목 검토와 사후관리,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로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윤신 과 장 이희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20 044-202-2828
담당부서 (암검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	한상균 과 장 신태환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510 044-202-2515
담당부서 (본인부담체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의원급에서 환자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관찰·관리·평가, 적절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관리모델 도입·확산('19년~)
 - * 의료 질 평가 기반으로 성과 중심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도 검토
- 고혈압·당뇨병부터 우선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점진적으로 확대*
 - * 의원에서 관리 가능하고 필요도 높은 질환을 선별, 적용방안 연구 진행('19년~)
- (사업 준비) 기존 유사한 시범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통합하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통합 등 개선 추진
 -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9년)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년~) 등

2. 추진 경과

- 기존 시범사업들을 통합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포괄적 관리모델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19.1월)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모델의 장점을 통합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참여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19년~)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고혈압·당뇨병→아토피, 천식 등)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용역 진행('20.10월~'21.4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하여, 본사업 도입 추진('22년上)

* ▲본사업 시 서비스 질 유지·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교육, ▲환자 본인부담 경감, ▲의사 책임 하 ICT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유관사업 연계·통합 방안(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우선 통합, 모델이 상이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단계적 통합) 등

- 만성 호흡기 질환 대상 시범사업 도입 추진 및 환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통합 방안 모색('22년下)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형을 마련하여 도입 방안 검토
2/4분기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모형을 마련하여 도입 방안 검토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질환 확대 방안 검토
3/4분기	-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질환 확대 방안 검토
4/4분기	-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환류 - 만성질환통합관리 방안 모색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	이선영 과 장 임영실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810 044-202-281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2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교육·상담의 효과성이 큰 분야를 선정하여 점차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제공 절차, 교육 과정 및 내용 등을 표준화한 후 제도화 추진
- (추진방안) 일차의료(외과)에 적합한 교육상담 체계부터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종별·지역별 확대 및 공통수가 포괄적용 등 검토
 -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우선 적용('19~)하고, 병원급은 효과성이 큰 질환*을 선별해 확대('21년~)
 - * 예> 환자·보호자의 질병 이해 증진이 치료과정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
 - 단계적으로 치과, 한의과, 약국 등의 교육·상담 수요,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대 방안 검토('20년~)
- ☞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시 기본진료료 개편 등과 연계

2. 추진 경과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등 시행('18.10월~)
 - 심층진찰료 산정횟수(기관별 1일 4명→전문의 1인당 4명) 확대, 사업 참여 동의서 개선 등 개선사항 반영(지침 개정, 19.3월)
 - 진료담당 의사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암·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 환자 대상 교육·상담료(병원급 이상 기관) 산정* 등 개선 필요사항 지속 반영
 - * (적용 시점) : 암환자 '15.12월 /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17.2월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정보와 실질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21.8월)

- 치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신설 등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수행('21.3~11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발전방안 마련('22년)
 - 수술관련 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로드맵 수립('22년上) 및 본사업 전환 검토
- 지속적인 치매환자 치료·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방안 검토('22년下)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시행
2/4분기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모니터링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개선방안 마련
3/4분기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방안 검토
4/4분기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방안 검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상답이 가능한 여건 마련,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2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종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주치의 등록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 확대
 - 포괄평가·계획, 교육·상담, 진료 의뢰·연계, 재택의료, 주 장애 관리 등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운영모델 마련 후 제도화('18~'20년)
- (대상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주치의 모형, 치·한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운영 모형 등 검토 및 단계적 도입('19년~)

2. 추진 경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18.5월~'20.5월) 및 평가('18.9월~'19.7월)
 - * 등록주치의 339명, 등록장애인 1,146명, 제공 서비스 수 8,885건(~'20.5월)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및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0.6월~'21.9월)
 - * 등록주치의 694명, 등록장애인 2,050명, 제공 서비스 수 9,213건('20.6월~'21.9월)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21.9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장애인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확대, 수가 개선 참여유인 제고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3단계 시범사업 시행('21.9월~)
 - (장애인 참여 증진)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 확대*, 만성질환 무료 검사 바우처 제공, 교육상담 수가 대상 확대(장애인→보호자 포함)
 - * (대상자) 중증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43만 명+ 중증 정신장애인 35만 명

- (주치의 참여 증진) 교육상담료 수가 세분화 및 인상, 의사 1인당 등록 가능 환자 수 확대(100명→200명) 등 주치의 참여 유인 제공
- (방문진료 유인 제고)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 비용을 포함하는 묶음 수가 신설, 방문 서비스 횟수 확대(연 12회→연 18회)
- (중장기 방안 마련) 3단계 시범사업 평가* 및 대안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대안적 지불모형 개발」(‘21.11~’22.5월)

○ (치·한의) 치과·한의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운영 모형 검토

- (치과)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확대 운영 모형 검토
- (한의)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 검토(계속)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환자 모집(4~5월)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수시) - 한의과 관리모델 검토(계속)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수시) - 연구용역 통한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 한의과 관리모델 검토(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수시) - 연구용역 통한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 한의과 관리모델 검토(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시범사업 개선사항 검토(10~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 및 미충족 의료수요 충족
-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 전화상담·재택의료 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심리적·물리적 의료 접근성 향상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최봉근 과 장 이효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280 044-202-3287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2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2-1. 의료 질 제고

1. 과제 개요

- (평가체계) 국가 단위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21년),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 강화('19년~)

* 역할·기능 정립, 유사지표 정비, 평가자료 수집체계 연계·통합 등 추진하고, 역할·기능에 따른 보상체계 연구·검토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예시)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
▶ 구조과정 등 인프라 평가	▶ 서비스 질 심층평가	▶ 기관 단위 종합평가

- (평가영역 및 지표) 중소병원, 정신건강, 노인질환(치매), 감염·안전 등 평가영역을 균형적으로 단계적 확대('19년~)

* 항생제 내성, 신생아중환자실 안전, 의료관련감염 예방 등

- 의료기관 유형·기능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평가지표 개선 및 결과지표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 강화('22년~)

* (유형·기능·특성 부합)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중소병원은 일반입원 등 (결과지표)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률,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률 등

- (평가기반) 의료기관의 정보관리 체계* 확충 및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등 지원 검토

* 입원 시 상병보고체계(POA),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등

2. 추진 경과

- 평가체계 개선

- 평가 간 중복지표 개선 등을 위한 의료질향상실무협의체 운영('19.2월)
-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평가정보뱅크(1단계, 적정성평가) 구축('20.12월)
- 지표관리 전문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지표분과위원회 구성·운영('21년下~)

○ 평가영역 확대 및 지표 개선

① 의료질 평가

- 환자안전과 연계한 의료 질 평가 결과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9.12월)
- 국민 체감도, 환자 중심성 강화를 위해 의료 질 평가 영역 재편* (5개 → 6개 영역)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수행('20.1~12월)

* 평가영역 : ①공공성, ②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③교육수련, ④연구개발 + (기존) ⑤환자안전 및 의료 질 → (재편) ⑤환자안전, ⑥의료 질

② 적정성 평가 등

- ▲ 정신건강 입원영역('19.8월), ▲ 중소병원('19.11월) ▲ 수혈('20.10월), ▲ 우울증 외래('21.1월), ▲ 치매('21.10월) 등 적정성 평가 대상 확대
- 2차 환자경험 평가 대상 확대(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개소) 및 결과 공개('20.7월)
- 환자중심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연구(서울대학교, ~'20.12월)
- 3차 환자경험 평가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추진(전체 종합병원 359개소) 및 전화 설문조사 수행('21.5~11월)
- 환자안전·감염예방 중심, 제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실시('21년下)
- 요양병원 2주기 3차 평가 대상기간 확대(3개월→6개월), 투약안전 지표 신설·평가 도입('21.7월)
- 기존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新 암 평가 체계 마련('21.10월, 대장암·폐암·위암 계획 발표)
-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연세대학교, '21.4~12월)
- 제1차 정비계획('19년)에 따라 적정성평가 25개 항목, 142가지표 정비 완료('21.12월)
- 평가지표 관리기준·절차 마련, 제2차 지표정비계획 수립('21.12월)

○ 평가기반 및 보상강화

- 실시간 진료정보 수집을 위한 평가정보 수집체계 마련('19.12월)
- e-Form시스템(표준서식)을 통한 7개 항목* 평가자료 수집 추진(~'21.12월)
 - * ('20년) NICU, 혈액투석, 마취, 수혈, ('21년) CABG, 폐렴, 정신건강입원 영역
- 평가결과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입원 시 상병정보(POA) 수집·활용방안 연구(울산대학교, '19.12월), 상병정보(POA) 수집·활용체계 및 요양기관 지원체계 마련*('20.12월)
 - * 청구방법·작성기준, 행정비용 보상방안, 정보관리 방안, 환자안전지표 개발 등
- 의료기관 상병정보 코딩지원을 위한 코딩지침, 사례집 개발('21.11월) 및 사례공유시스템 마련('21.12월)
 - * 관련단체 및 임상전문가 참여 기반의 전문가 검토단 구성·운영
-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 지급(급성기뇌졸중 등 8항목)
 - * ('19년) 가산 199억원 감산 5억 ('20년) 가산 216억원 감산 7억 ('21년) 211억원 감산 2억원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평가체계) 국가 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 강화
 -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용역(~'21.12월) 결과 등을 토대로 의료질 평가-적정성 평가 등 평가제도 간 연계·조정방안 검토('22년)
 - 평가정보 통합포털 구축('22년下)과 연계, 평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지속)
- (평가영역 확대 및 지표 개선) 의료질 평가 및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등 지속 추진
 - ①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연구용역 결과(~'21.12월)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 유형, 특성 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개선방안 검토('22년)

- 의료기관 중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능에 맞는 평가체계(평가지표, 보상방식 등) 개선 추진
-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지표 중심의 현 평가체계를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개선

② (적정성 평가 등) 환자 안전·중심 평가 확대 및 평가지표 개선

-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도입('22년下), 1차 수혈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22.7월) 및 제2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22년下)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22.7월) 및 모바일 웹 조사 도입 등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22.3~9월)
- 병원 유형분류 기반 평가모형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연구('22.3~12월)
- 2주기 新 암 평가 체계에 따른 위암·대장암·폐암 적정성평가 (평가 대상기간 '22.1~12월) 실시 및 유방암·간암 적정성평가 개편('22년下)
-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22년上), 환자안전 및 결과 지표 강화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개편('22년下)
- 제2차 지표정비계획('21.12월, 결과지표 도입 등 핵심지표 강화)에 따른 지표 정비 추진(지속)

○ (평가기반 및 보상강화) 자료 수집체계 개선, 성과에 따른 보상 강화 추진

- e-Form(표준서식)을 통한 평가자료 적시 수집 대상항목 확대('22.10~12월)
 - * 4항목('20년) → 7항목('21년) → 10항목('22년)
- 환자 안전 및 정확한 평가결과 산출을 위한 상병(POA) 정보수집 및 코딩지침·사례 등 교육(지속)
- 상병(POA) 정보 정확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2.4~10월)
- 병·의원급 중심 가감지급 체계 개선('22년下)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분석 및 결과 활용 논의(1~6월) -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3~9월) -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 연구(3~12월) - 2주기 新 유방암·간암 평가의 대상, 평가지표 등 적용 타당성 검토(1~3월) - 평가정보 수집체계 전환(조사표→심사평가표준서식) 확대항목 검토 및 선정(2월) - 제2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라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지표검토(3월) - POA 코딩지침 및 사례적용 관련 교육·홍보 - (가칭) 'POA 코딩검토위원회' 구성 - 핵심지표 선정계획 수립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4~6월) -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3~9월) - 3차 환자경험 평가결과 및 활용(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6월) -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 연구(3~12월) - 2주기 新 유방암·간암 평가기준 수립 및 수용성 확보 위한 의견수렴(4~6월) - 단계적 지표 개선 및 종료(안) 마련(6월) - POA 정보 정확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연구(4~11월) - 핵심지표 선정 완료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7월) -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3~9월) - 3차 환자경험 평가결과 요양기관 통보 및 대국민 공개(7월) -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 연구(3~12월) - 新 중환자실 4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수립(7월) - 2주기 新 유방암·간암 평가 세부기준 심의기구에서 확정(9월) - 非핵심지표 지표정비 추진 및 핵심지표 재평가(7월~) - POA 사례 추가 발굴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공유시스템 업데이트(분기1회) - 의료질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검토(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검토(9~12월) -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발전방안 마련 연구(3~12월) 및 2차 계획 공개(12월) - 新 중환자실 4차 평가 도입(10월) - 2주기 新 유방암·간암 평가 세부시행계획(안)수립 및 평가계획 공개(10월) - 의료질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의료계·전문가 등 의견수렴(10~12월) - 의료질 평가-적정성 평가 등 평가제도 간 연계·조정방안 검토(12월) - 병·의원급 중심 가감지급 항목 확대 검토(10~12월) - 非핵심지표 지표정비 완료 및 핵심지표 재평가(지속) - POA 코딩지침 및 사례집 개정판 배포(12월) - 평가정보 수집체계 전환(조사표→심사평가표준서식) 확대 및 서식공개(10~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투자·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 질 및 환자안전 향상 가능
- 성과에 기반한 보상강화로 의료 질 향상 효과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담당자	이상희 과 장 김희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70 044-202-2780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고형우 과 장 김성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20 044-202-2404

1. 과제 개요

- (심사방식)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불합리한 기준 등은 개선*하면서 단계적 전환
 - * 예> 이상기관 집중심사, 수가·급여기준 개선, 평가대상 개선, 보상 연동 등
- 임상 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 설정·운영,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 도입, 심사기준·절차 공개 등 병행
 - * 예> 현장 전문가 그룹에 의한 심사, 우수기관 자율관리제 등
- (심사·평가 연계)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 구축
 - 적정 자료 수집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 심사·평가를 연계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병행

2. 추진 경과

- 심사방식 개선 근거 마련 및 시행('19.7월~)
 -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고시 제2019-175호)
-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 실시 및 개선방안 연구 수행
 - (주제별 분석심사) 고혈압·당뇨병 등 5개 항목 실시('19.8월~), 만성 신장병·폐렴 2개 항목 추가 실시('21.10월~)
 -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천식, COPD, 만성신장병, (급성기질환) 슬관절치환술, 폐렴
 - (자율형 분석심사) 중증질환 중 뇌졸중 입원 진료 영역 실시('21.7월~)
- 의료 질과 비용 연계 분석 및 의료기관 중재를 위한 차세대 분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20.1월~)
- 이해관계자 참여한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20.10월~)
 - * 보건의료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구성

- 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심평원 심사업무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연 단위 심사발전계획 수립

* '21년 이행실적 및 '22년 심사발전계획 보고 ('21.12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심사발전계획) 심사제도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한 '22년 심사발전 계획 수립('22년上) 및 이행 점검
- (체계개편/기존심사정비)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본사업 전환 및 기관별 중재 확대 검토
 -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확대, 신규(전봉성형술 등) 모형개발 및 적용
 - *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등 정비
 - 우수기관 자율관리 방식 선도사업의 안정적 운영, 주요 분야별 (허혈성 심장질환 등) 확대 검토
 - 분석기능을 도입한 경향기반 분석심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대내·외 소통 강화 및 심사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심사기준 정비·개선체계 상시 운영
- (심사 - 평가 연계) 심사 - 평가 연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로드맵 마련
 - 전문가 중심 심사 - 평가 연계 협의체 구성 및 연계모형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22.1월~)
 -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등 관련 고시 정비
 - 심사 - 평가 정보수집 실행 및 보상방안 단계적 로드맵 도출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발전계획)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개최 및 심사발전계획 수립(~3월) - (체계개편) 분석심사 확대 모형 개발, 심사기준정비·개선체계 상시 운영(~12월) - (심사평가연계) 심사·평가 연계 협의체 구성·운영, 연계모형 개발(~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발전계획) 세부과제 이행점검(~12월) - (체계개편) 분석심사 확대 모형 개발, 심사기준정비·개선체계 상시 운영(~12월) - (심사평가연계) 심사·평가 연계 법령 개정 추진(~6월), 정보수집 실행방안 마련(~12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발전계획) 세부과제 이행점검(~12월) - (체계개편) 분석심사 확대 모형 개발, 심사기준정비·개선체계 상시 운영(~12월) - (심사평가연계) 심사·평가 연계 협의체 운영, 정보수집 실행방안 마련(~12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발전계획) 세부과제 이행점검, 제2기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운영(~12월) - (체계개편) 분석심사 확대 모형 개발, 심사기준정비·개선체계 상시 운영(~12월) - (심사평가연계) 심사·평가 연계 협의체 운영, 정보수집 실행방안 마련(~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 체감효과 상승
- 진료의 자율성·전문성 보장과 가치기반 통합적 의료서비스 관리 모형 정착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	----------------	-----	--------------------	------	------------------------------

1. 과제 개요

- (진료정보 교류) 환자 의뢰·회송에 표준화된 전자적 진료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정보를 내실있게 제공한 경우 수가 가산 추진('19년~)
- * 환자 의뢰·회송 과정에서 검사 영상 및 진료기록 요약지 등 제공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제 시범사업('18~'19년)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시행('20.6월~) 및 EMR 인증 수가 가산 검토

2. 추진 경과

-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및 회송 활성화 및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의료기관 확산

- (의뢰)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적용, 내실있는 환자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진료정보와 영상정보가 교류되는 경우 수가 차등화('20.11월)

구분	현재	→	개선	
진료의뢰료	의뢰환자관리료	→	진료의뢰료Ⅰ	의뢰서
			진료의뢰료Ⅱ	의뢰서+진료정보
			진료의뢰료Ⅲ	의뢰서+진료정보+영상정보

- (회송)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정규 수가로 전환,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 차등('20.10월)
- (교류) 의뢰·회송, 환자 임의방문 시 활용 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15개 거점 문서저장소 구축 및 협력 병·의원 6,400여 개 확산

* '20년 신규 문서저장소 2개소(서울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구축

-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 시행

- EMR 인증제 운영 고시 제정·발령('20.6월), 인증기준 확정('20.7월), 인증신청 접수('20.7월), 인증 심사('20.8월~) 등 추진

* ('20년) 25건 심사 완료, ('21년) 목표치 50건으로 (제품인증) 심사 수행 중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내실화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를 위해 로드맵 수립 연구 추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로드맵 연구」('20.10~'21.6, 서울대학교)

<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로드맵 연구 주요내용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수가제도 개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한 환자안전 전략 수립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전략 수립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전략 수립

- 인증제 도입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 인증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는 비용 지원('20.10~'21.9월)

- EMR 제품 10개의 개선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확산('20년 추경 56억원)

- 로드맵 수립 연구결과를 토대로, EMR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확대·정착하기 위한 EMR 인증 수가 방안 마련 연구 추진

* 인증제 로드맵 및 국가보건의료정책 과제와 연계한 단계별 수가 지급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연구('21.10~'22.3월 예정)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진료정보교류) 신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확산 및 정보 공유 활성화(~'22.12월)
- (응급환자전원) 응급의료기관간 진료연속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전원지원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간 연계(~'22.7월)
- (병역 검사 활용) 병역의무자 의료정보 공유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1차적으로 CT·MRI 등 영상정보를 연계하고 업무 협의를 통한 병무용진단서 등 진료정보 추가 연계(~'22.12월)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22.3월), 인증수가 시범사업 검토·추진(~'22년下)

*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 의료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및 진료연속성 보장을 위해, 기능성, 상호호환성 및 보안성 분야 일정 요건 충족한 EMR시스템에 대해 인증

- 의료질평가 적용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증 EMR 보급·확산('22년~)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수가 방안 마련(~3월)
2/4분기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제 수가 시범사업 검토·추진 (4월~12월)
3/4분기	- (진료정보교류) 응급환자전원 지원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제 수가 시범사업 검토·추진 (4월~12월)
4/4분기	- (진료정보교류) 병역의무자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제 수가 시범사업 검토·추진 (4월~12월)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료질평가 위한 종합병원급 대상 인증 EMR 보급·확산 (~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진료정보교류)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 강화, 환자 불편 해소, 의료비용 절감
 - 표준 기반의 상호운용성·보안성 강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기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된 표준 EMR 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유도하여, 의료 질 제고·환자 안전·상호운용성 등의 지속적 개선
 - 의료기관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국가 단위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 구축, 개인건강기록(PHR) 제도 확립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정연희 과 장 최병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920 044-202-2929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종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2-2.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

1. 과제 개요

- (상대가치 개편) 주기적으로 수가간 불균형 해소, 진료행태 변화 반영 등 수가 체계를 정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수가체계 운영
 -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등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검체검사의 수가는 인하하여 영역 간 불균형 해소 추진('17~'20년)
 - 회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있는 수가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 의료환경 조성 지원
 - 보험급여 재평가, 환산지수 등과 연계성 확보
- (기본진료료) 자원투입량(의사·간호사 진료시간 등), 정책요소(의료기관 종별 역할정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진찰료·입원료 등 개편('21년~)
 - 진찰시간, 환자중증도 등 진료특성에 따라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고, 의료기관별 전문화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 심층진찰,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수가항목 및 제도간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산제도 등) 기존 가산 평가, 가산 도입 원칙 및 조정 기전 마련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연구: '18~'19년 → 시행: '21년~)
 - 종별 가산제도는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 탄력적 형태로 개편을 검토하고, 필요시 행위 재분류 등 세부 조정 작업도 병행

2. 추진 경과

- (제2차 상대가치 개편) 3~4단계 수가 조정안 마련 및 시행('19~'20년)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18~'20년)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 논의('19.6월, 12월) 및 연구결과 및 개편안 검토('20.12월~)

- 제2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21.10월)하여 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방안 논의('21.11~12월)

* 가산제도 개편 및 폐지 행위 선정,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검체검사 상대가치점수화 등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행위료) 회계조사 등 연구결과 반영하여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점수 산출 및 조정('22.2분기~)
 - (업무량) 행위별 업무량 연구결과 검토·보완 및 행위 재분류 진행
 - (진료비용) 행위별 직접비용(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 근거자료에 대한 부문별·행위 유형별 검토 및 임상전문가패널 논의 반영
 - * 전문과·분야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균형성 조정
 - (위험도) 위험도 연구결과*를 감안한 산출 방안 검토
 - * 의료기관 회계공시 및 원가기반 부문별 의료분쟁 비용 추계
-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22.2분기~)
 - (종별 가산) 행위 유형간 불균형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적합 질환 진료시 이익이 크도록 보상체계 재설계
 - * 유형별, 행위별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여 가산율 차등 적용 등
 - (원료 가산) 진료행태 변화 등 최근 의료 현실 고려하여 내과·소아과·정신과 분야 가산 개편
 - (기본진료료)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 진료 정비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구성요소별 상대가치점수 구축 내역 보완·검증 및 조정(1월~6월) - 행위 재분류 검토 및 행위정의 비교 검토 및 검증(1월~6월) -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실행 방안 마련(1월~6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 구성요소별 상대가치점수 구축 내역 보완·검증 및 조정(1월~6월) - 행위 재분류 검토 및 행위정의 비교 검토 및 검증(1월~6월) -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실행 방안 마련(1월~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구성요소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7월~9월) - 행위 재분류 결과 심의·의결 및 행위정의 개정 구축(7월~12월) -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도입(7월~12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조정(10월~12월) - 행위 재분류 결과 심의·의결 및 행위정의 개정 구축(7월~12월) - 기본진료료 및 수가가산제도 개편 도입(7월~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성 및 신뢰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	----------------	-----	--------------------	------	------------------------------

1. 과제 개요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 (간호사 야간근무)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공('19년~)
 - (의료정보·행정) 심사체계 개편 및 평가·인증 등을 위한 자료 제출·관리 인력 확충 지원('20년~)
 - (안전관리)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청원경찰 등) 확보 지원('19년~)
 - * 보안인력 확보 관련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정(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응급 의료수가 개선 병행 검토
 - (전문인력 확충)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배치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 전문인력 등 특정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보상 확대('19년~)
 - * 예>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 (간호인력) 입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지역 단위 적정 인력 배치 시범사업** 추진 검토
 - *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 단계적 추진
 - ** 신규 배출 인력의 해당 지역내 근무, 기존 근무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 검토

2. 추진 경과

- (간호사 야간근무)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 및 병원 근무유인을 제고를 위해 야간간호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 * 수도권 및 대형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으로 우선 적용

- (야간근무 수당지원) 야간간호 보상 확대 및 야간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료* 신설('19.10월) 및 서울지역 확대 적용('21.4월)
- * (가이드라인) 야간간호료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
- (야간전담간호사)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 및 야간전담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수가 개선('19.10월)
- (안전관리)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배치기준 명시를 위한 응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0년)
- (전문인력 확충)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배치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 전문인력 등 특정 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보상 확대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생아·소아중환자실 내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 확충되도록 가산 수가 신설('19.4월)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16.9월~'21.1월)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21.1월), 성과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안) 마련하여 건정심 보고('21.3월)
- (간호인력) 입원실에 적정 수의 간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 (입원환자 수) 경기도·광역시 소재 병원이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도록 개선('19.10월)
- (간호사 재직일수) 병동 간호사 운영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20.7월)
- * (현재) 매월 15일에 해당 간호인력의 근무 여부에 따라 인력 산정 여부 결정→ (개선) 해당 분기에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비율로 간호인력 신고
- (미신고 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여 입원료 감산 지급 강화('20.1월)
-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모형 등 추진 검토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간호사 야간근무)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 및 지역 확대(+상급종합병원, 서울) 적용('22년上)
- (간호인력) 간호등급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로 개편 검토('22년 검토, '23년 시행 예정)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및 파급효과, ▲간호사 수급방안 등을 포함한 간호등급제 개편 연구용역 실시('22년上)
 - 노동계·병원계·간호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하여 의견 수렴('22년)
- (전문인력 확충) 입원환자의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배치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 전담인력에 대한 보완사항 검토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 평가하여 건정심 보고('22.2~3분기)
- (근무환경 개선)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2년上)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인력) 간호등급제 개편을 위한 연구 시행(1~6월) - (전문인력)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연구 준비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1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실시(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인력) 간호등급제 개편을 위한 연구 시행(1~6월) - (전문인력)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연구 시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4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4월~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인력) 간호등급제 개편안 마련 - (전문인력)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결과 건정심 보고(9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7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7월~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인력) 간호등급제 개편안 마련, 추진 - (전문인력)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10월)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운영(10월~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간호사 이직률 감소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적용하여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 유도
- 전문의가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 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안전 강화 및 환자 입원진료 질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	----------------	-----	--------------------	------	------------------------------

1. 과제 개요

-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생명·건강에 직결된 중증·공익 의료가 지역·기관·과목, 분야 별로 균형 있게 제공되기 위한 기반 마련
 - (영역)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 강화
 - * 미숙아, 조산아 등 필수 의료서비스(수술 등) 제공인력(예: 소아외과) 우선 추진, 응급의료 및 권역외상 센터 보상체계 개선 등
 - (과목) 외과계 기피과목(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하여 수가 가산 체계 정비
 - (지역) 간호인력의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의료취약 지역 대상 가산제도 도입 및 본인부담 인상 방지방안 마련
 - * 의료취약지역, 군지역 등 대상지역 및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등
 - (환자 안전)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단계적 추진
 - *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중환자실 격리료, 마약류 관리 수가, DUR 개선 및 관련 안전활동 보상, 수술실 감염·안전 관리 수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등
 - (결핵 예방·관리) 결핵환자(잠복, 내성환자 등 포함)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개선('20년~)

2. 추진 경과

- (필수 의료) 필수의료분야 지원강화 위한 수가 개선
 - (분만·수술) 분만수가 인상, 분만前 감시 수가 세분화 및 인상, 극소저체중 소아 수술 가산 신설 등('21.2월~)

- (응급·외상) 응급실 전담 인력 확보 위한 응급수가 개선('21.1월~)
중증외상환자 진료 특성을 고려한 처치 수가 개선('21.12월~)
- (지역) 취약지 간호인력 시범사업 대상기관(종별·지역) 확대*('20.1월),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기관·간호사 대상 의견수렴('21.9월)
 - * (기존)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80개 기관) → (확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및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138개 기관)
 - (의뢰가산)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17개 행정구역)
종합병원 이상(전문병원 포함)으로 의뢰 시 수가 가산* 적용('20.11월)
 - * 진료의뢰료 1 의 30%, 본인부담 0%
- (환자 안전) 환자안전법 제정('16.7월) 등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16.9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17.10월), 마약류안전관리료('19.1월), 수술실
안전관리료('19.5월)를 신설
 - (감염관리) 의료법 개정내용('21.12.30.시행)과 유형별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고려하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대상 확대('21.12월)
 - (안전관리) 입원환자의 상태 악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 운영
(‘19.5월~) 및 시범사업 효과평가 등을 위한 연구 시행(~'21.12월)**
 - * 일반병동 입원 환자의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
 -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평가 및 표준모형 개발 연구('21.5~'21.12.)
 - (DUR)시스템 개선 및 관련 안전활동 보상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19.8~12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20.4~12월)
 - *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사 추가행위 : 약물 사용 사후모니터링, 알레르기·
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특정질환(신·간 질환자) 약물투여 안전관리
 - (치료재료 별도보상)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 23항목*
별도보상 실시('19.11월~'20.1월)
 - * 1회용 관절 봉합용 NEEDLE, 홍채 확장용 기구 등

- (결핵 예방·관리)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이소니아아젯) 급여기준 개선('20.7월)

- 건강검진 시 결핵 관련 소견자의 본인부담 면제 적용('21.1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심뇌혈관질환) 권역별 네트워크(권역·지역심뇌혈관센터 등) 중심으로 환자 통합 평가, 응급진료·회송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 연계 보상 시범사업 검토('22년下)
- (당뇨병) 인슐린 사용 1형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기기 적정 사용 및 질 관리 위한 행위수가 개선('22년上)
 - * 비급여 연속혈당측정검사 수가 급여화 검토
- (지역)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속 실시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 확대 및 간호서비스 질 향상 지원(연중)
- (환자 안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 추진, 신속대응 시스템시범사업 개선방안 검토('22년下)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응급 심뇌혈관질환 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보고(~3월) -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방안 검토(~3월) - (격리실 입원료) 감염병 별 격리실 입원료 급여적용 필요성 검토 - (신속대응) 효과평가 연구결과를 반영한 모형, 수가 등 개선방안 검토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응급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기관 지정 및 적용(5월~) -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수가 개선 건정심 보고(4월) - (격리실 입원료) 감염병 별 격리실 입원료 급여적용 필요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적용 추진 - (신속대응) 효과평가 연구결과를 반영한 모형, 수가 등 개선방안 검토

구분	추진일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적용 확대 추진 - (신속대응) 효과평가 연구결과를 반영한 모형, 수가 등 개선방안 마련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적용 확대 적용 - (신속대응)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 - (감염예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 추진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격리실 입원료 급여화 및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으로 안전한 의료환경과 감염예방체계 구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장 조미라 사무관 조영대 사무관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4 044-202-2733 044-202-2745
------	----------------	-----	---	------	--

1. 과제 개요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및 진료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보상 수가(안) 마련('19년)
 - 실포괄 모형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물가변동 등 요인을 고려한 독립적인 조정 기전 등 적용 검토
- (실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 지속 확대('22년, 5만 병상)
 - 민간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진료의 자율성 및 효율성 등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 모형 개선
 - 기관별 비급여 규모를 자발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도록 비급여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의료 질 평가지표 강화('19년)
 - 단계적으로 정책가산 규모를 줄여 나가되, 기본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원가기반 수가 개발('20년~)
-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적정 입원은 보장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는 지원하는 수가 개선('19년~)
 - 환자 분류를 입원 필요성에 따라 정비하고, 본인부담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입원 유도
 - 인구구조 및 환자 질병군 변화 등에 맞춰 요양병원이 적절히 기능하도록, 환자분류체계·일당정액수가 등 정기적인 조정 기전 마련
- (의료 질 향상) 진료비 예측 가능성 확보, 총 치료기간 내 진료비 규모 및 진료성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등 묶음수가 검토('20년~)
 - 다양한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 협력하여 환자 중심의 진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가제도 연구 추진 병행

2. 추진 경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포괄수가 시범사업 실시('97년~'01년), 선택참여 방식의 포괄수가제 본사업 실시('02년~'12.6월)
 - 병·의원급('12.7월), 종합병원급('13.7월) 이상으로 포괄수가 단계적 확대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비용기반 포괄수가 개편 시행('20.1월)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충북대 산학협력단, '19.10월)
- (신포괄수가제) 20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 실시(건보 일산병원, '09.4월), 질병군 및 대상병원 확대(공공병원 중심, 559개 질병군, ~'18.8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에 포함되어 민간병원으로 참여기관 확대, '20년 현재 98개 기관, 567개 질병군 포함
 - ▲지불제도의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22년 수가에 적용 예정)
 - *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 인증 평가지표 도입, 진료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조정 계수 분류 개선,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 재설정 등
 - 1:1 기관 맞춤형 '신포괄수가 간담회(비대면 영상)'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참여 기관 애로사항 해소('21년 15차수 17개소)
 - * 기관별 청구현황 공유, 주요 코딩 오류사례 위주로 진단 코딩 심사현황 안내 등
-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 개편 방향을 건정심 보고('14.10월)하고, 협의체 운영·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18.12월)
 - 요양병원 수가 개편 Part I ('18.12월), Part II ('19.4월), Part III('19.11월) 건정심 의결, 순차적 시행

< 요양병원 수가 개편 Part I, II, III 주요 내용 >

- (Part I)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의료인력(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 과밀병상(9인 병실) 수가 인하
- (Part II)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조정(7개→5개) 및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 개선(중증↑, 경증·선택입원군 유지),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강화
- (Part III) 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가산율 조정 20%→18%, 8개 전문과목 전문의 → 전체 전문의)

- (의료 질 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효과 평가('20년) 및 시범사업 성과 건정심 보고('21년)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비용기반 포괄수가의 합리적·안정적인 조정기전 마련 추진*('22년下)

*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기전 조정방안 마련 연구('22.3~11월)

- (신포괄수가제) 정책 추진현황과 연계하여 신포괄수가 적용대상 확대 추진 및 비용(원가)기반 수가 산출 방법 검토*('22년下)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적정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22.3~11월)

-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요양병원 환자군 변경 등 수가개편에 따른 청구현황 분기별 모니터링 및 개편 수가의 기준 개선 검토(연중)

- (의료 질 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 및 묶음 수가 적용방안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표준진료내역 구축,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 연구('22.1월~12월) - (신포괄수가) 비용기반 수가개발 방안 검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영향 평가 연구('22.1월~12월) -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따른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기준개선 검토 - (의료질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묶음수가 적용방안 검토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합리적 비용분석,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 연구('22.1월~12월) - (신포괄수가) 비용기반 수가개발 방안 검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영향 평가 연구('22.1월~12월) -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따른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기준개선 검토 - (의료질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묶음수가 적용방안 검토

구분	추진일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모형 개선 및 조정기전 검토,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 연구('22.1월~12월) - (신포괄수가) 비용기반 수가개발 방안 검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영향 평가 연구('22.1월~12월) -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따른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기준개선 검토 - (의료질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묶음수가 적용방안 검토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질병군) 합리적·안정적인 포괄수가 조정기전 검토,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 연구('22.1월~12월) - (신포괄수가) 비용기반 수가개발 방안 검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영향 평가 연구('22.1월~12월) -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따른 청구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기준개선 검토 - (의료질향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묶음수가 적용방안 검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진료행태 및 정책 목적에 따른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인 의료체계 마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2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	이선영 과 장 임영실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810 044-202-2815

3.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3-1.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1. 과제 개요

- (정부지원) 현행 한시적인 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개정 추진(~'22년)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유효기간('22.12월) 만료 이전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를 거쳐 개정 지원('22년~)
 - (보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 수준(평균 3.2%)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계속)
 - 오랜 기간 건강보험을 운영해 보장성과 보험료 부담이 안정적인 균형을 이룬 외국(독일, 일본, 프랑스 등) 사례 참조하여 검토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확대*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병행 추진
- * 예)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프리랜서 등)

2. 추진 경과

- (정부지원)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적 뒷받침,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매년 예산규모* 확대
 - * (정부지원) '18년 7.1조원(13.2%) → '19년 7.9조원(13.2%) → '20년 9.0조원(14.3%) → '21년 9.5조원(14.3%) → '22년 10.5조원(14.4%, 국회에서 1천억(1%p) 증액)
- (보험료) 보장성 확대 필요성,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공급자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매년 보험료율 조정
 - '22년도 보험료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 위원간 만장일치로 1.89% 인상 결정
 - * (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 '21년 2.89% → '22년 1.89%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정부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3년도 정부지원 확대 노력(연중)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지원 기준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연중)
 - * ▲기동민의원안, ▲이정문의원안, ▲정춘숙의원안, ▲이종성의원안 등 관련 개정안 既발의
 - 정부지원 법정 시한(~'22.12월) 연장 등을 위한 건강보험법(부칙 제2조) 개정 추진
- (보험료율) 건강보험 재정여건, 국민의 부담 여력,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 보험료율* 결정(8월)
 - *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내에서 인상(보장성 대책, '17.8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정부지원)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1월) 및 기재부 심의
2/4분기	- (정부지원) 2023년도 예산 부처안 마련 및 기재부 제출(5월) - (보험료율)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보험료율 결정(잠정)
3/4분기	- (정부지원) 예산안 기재부 심의(6~8월) 및 정부안 국회 제출(9월) 지원 시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 개정
4/4분기	- (정부지원) 국회 심의(9~12월) 및 확정(12월) 정부지원 기준 및 한시조항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김웅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5
------	----------------	-----	--------------------	------	------------------------------

1. 과제 개요

- (투명성) 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건강보험 제도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19년)
 - * 가입자 및 공급자 ** 보험료율 결정의 근거, 재정전망 등 공개 확대
- (예측가능성) 단기보험 특성, 복잡한 수입·지출 변수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추계 등 건강보험에 적합한 재정 추계모형 연구·개발('19년)
 - 그간 추계들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인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도출하고, 추계모형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추진('20년)
- (안정성) 급여청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험급여 지출현황 분석 및 체계적인 재정 관리 추진('19~'20년)
 - 보험급여 항목, 요양기관, 상병, 환자, 재원일수 등 특성별 이용량 변화 및 지출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19년~)
 - 재정투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출 특성 등을 고려한 분야 또는 항목*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내 구분계리*하여 운영 검토
 - * 예> 예방·건강증진, 시범사업, 급여·의료기술 평가 등
 - ※ 재정관리, 재원조달, 기금화 등 재정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검토 추진('20년)

2. 추진 경과

-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이용량 변동, ▲가입자 소득 변동 ▲코로나19 지출 등으로 건강보험 수입·지출 변동성 심화
 - ▲코로나19 유행상황, ▲백신접종, ▲경기 변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중기 재정전망 실시하여 환산지수·보험료율 산출시 적용
- 보험료율, 수가 결정 등 재정운영 체계 관련 주요국 사례 연구를 토대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 개선방안 검토
 - * 주요국 공적 의료보장체계 재정운영 사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1.7월)

- 건강보험 재정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출현황 상세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21년 연중)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진료비 연구) 총진료비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 - 상대가치 - 종별가산 등) 개선방안 검토*(~'22.10월)
 - * 건강보험공단 연구(2023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와 병행, 보사연 ~'22.10월)
- (재정관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이용량 변동, ▲가입자 소득 변동 ▲코로나19 지출 등 재정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전망 실시
 -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핵심 재무위험 요인 관리, 재정영향평가 등, 연중)

□ 세부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재정관리)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수가결정 개선방안 검토 및 진료비 관리방안 연구
2/4분기	- (재정관리)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수가결정 개선방안 검토 및 진료비 관리방안 연구
3/4분기	- (재정관리)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수가결정 개선방안 검토 및 진료비 관리방안 연구
4/4분기	- (재정관리) 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수가결정 개선방안 검토 및 진료비 관리방안 연구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수가결정 개선 방안 모색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김웅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5
------	----------------	-----	--------------------	------	------------------------------

3-2. 의료이용 적정화

1. 과제 개요

- (본인부담 차등 개선)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선, 의료제공체계 개편 등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22년)
 - 의료 이용·제공에 미치는 영향,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평가('21년)를 실시하고, 대상질환·항목·적용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의료이용 관리)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과소)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 마련('20년)
 -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필요 대비 과다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부터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 본인부담경감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복합만성질환·정신질환 등 다빈도 유형 발굴 및 상담·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내역, 의료기관 관련 정보 등 제공 강화 추진

2. 추진 경과

- (본인부담 차등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 지정, 운영('11.10월~), 중이염, 티눈 등 100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18.11월~),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재정 및 본인부담금 실태연구 보고('20.4월, 심평원)
- (의료이용 안내)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사업' 관련 안내문 마련('19년) 및 확대 추진
- (의료이용 관리) 연구용역*을 통한 과다·과소 의료이용의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모델 마련
 -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19.5~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방안' ('20.4~12월)

- 과다의료이용자 사례관리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

* 의료이용지원 사례관리 운영방안 연구 ('21. 5.~12월, 우송대 산학협력단)

**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례관리 모형 검증(춘천·화성·원주지역, '21. 9.~12월)

- (약물사용 관리)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지역사회 거주자와 병원 이용자 대상 의약 전문가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및 사업 확대 추진

* 약사모형('18.7월~), 의원모형('19.9월~), 병원모형('20.8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본인부담 차등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방안 추진

- 환자 의료이용의 대형병원 선호 및 쏠림현상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의 개선방안 추진

* 의원급 및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 의료기관 전달체계 개선, 의료비용 절감 등 제도시행에 따른 경증 질환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정책효과 분석 및 개선안 검토

- (의료이용 관리) 수요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검토

- (협의체 운영) 건보공단·복지부·심평원 협의체 운영으로 과다·이상 의료이용 사례·원인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 (관리체계) 과다의료 이용기준 개선, 과다의료이용자 특성·행태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22년上)

- (사례관리 시범사업)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개인별 맞춤 상담, 교육 제공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 확대('22년上)

* 지역 확대('21년 3곳 → '22년 10곳), 수행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영역 수행

- (제도 개선 검토) 의료필요 대비 과다 의료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에 대한 제한적 본인부담 경감제도* 검토

* 의료급여제도(급여일수 제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타 제도 참고

- (약물사용 관리) 환자중심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제도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으로 통합모형* 시범사업 실시('22년 上), 병원모형 체계화**, 장기요양시설 모형 개발·추진('22년 下)
 - * 기존의 약사모형, 의원모형 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의·약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 중심의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제공
 - ** 참여병원 담당자 대상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참여병원과 간담회 시행으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적용 등
 - 의료이용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효과성 평가 및 다제약물 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 추진('22년 下)
 - * 예: 필수 약제 복약순응도 변화, 복용 약물 수 변화 등
- (알 권리 강화) 공급자의 자정 노력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 및 이용자의 적정 의료이용 문화 정착 지원
 - * 의료전문인 주도로 적정 진료 리스트를 작성·보급하여 환자의 알 권리 강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캠페인
 - 참여 학회* 확대 및 불필요 진료목록 개발 지원, 학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YMCA 등)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확산**('22년 下)
 - * (현재) 영상의학회, 비뇨기학회, 내과 등 5개 학회 참여
 - ** '의료이용자용 의료이용 가이드' 개발·제공, 홍보 영상 제작 등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이용) 다빈도 의료이용자 상담 강화, 사례관리 연계 추진(계속) - (의료이용) 의료이용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확대(3월~) - (의료이용) 과다의료이용 관리체계 개선(3월) - (약물사용 관리) 의약사 협업 시범지역 선정, 전문가 자문 등 개선사항 검토(3월) - (알권리 강화) Choosing Wisely 캠페인(계속) - (본인부담 차등 개선)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분석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사용 관리) 다제약물 관리사업 평가체계 개선(4월) - (약물사용 관리) 의약사 협업 통합모형 시범사업 시행(5월~) - (알권리 강화) Choosing Wisely 캠페인(계속) - (본인부담 차등 개선)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개최

구분	추진일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사용 관리) 사업 운영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및 개선사항 검토(9월) - (약물사용 관리)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7월~9월) - (알권리 강화) Choosing Wisely 캠페인(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이용) 의료이용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검토(11월) - (약물사용 관리) 병원모형 체계화 방안 수립 및 장기요양시설모형 개발(12월) - (알권리 강화) Choosing Wisely 캠페인(계속)

*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 및 체계적 의료이용 관리 모형 개발
- 다제약물 복용에 따른 약물 부작용,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 공급자 주도 ‘Choosing Wisely’ 캠페인 확대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재정 안정화 기여
-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1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임화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2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1. 과제 개요

- (관계 정립)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장범위 조정 검토**(‘19년)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공보험 체계 개편에 맞추어 실손보험의 보장 영역 변경 등 역할 재정립 추진**(‘21년)
- (연계 체계)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관리 체계화**를 위해 연계 관리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등 **법적 근거 마련**(‘19년)
 - * (장기) **전체 의료비 부담 적정화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각종 제도(**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 추진(‘20)

2. 추진 경과

- 복지부 - 금융위 공동으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각 부처 차관 공동 위원장)를 구성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검토**(‘17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지급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실손보험료에 반영(‘18년~)
 - * ‘18년 6.15%, ‘19년 0.6%(반영 보류), ‘20년 2.42% 산출 및 반영, ‘21년 연구도 추진하여 반영 예정
- 20대 국회 당시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하였으나, 소관 상임위(복지위 vs 정무위) 미결 상태로 회기 종료
 - 이후 정부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 및 양 부처 공동 소관 시행령 제정 추진 중(‘20년~)
 - * ‘21.9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9.14. 국무회의 통과)
- 본인부담률 인상 및 할증제 도입 등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금융위원회, ‘21.7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법적 근거 마련) 공·사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 후 양 부처 공동 소관 시행령 제정 추진('22년)
 - * 공동시행령을 통해 양 부처 공동 주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반기별 1회 등)
- (실태조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영향 실태조사 방안 마련('22년下)
 - * 실태조사 목적, 분석방법, 자료수집, 결과 예시 등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모형 확정(필요시 정책연구 용역 실시)
- (의료보장제도 연계) 산재·보훈·자동차보험 등 타 의료보장제도와의 연계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칭) 의료보장정책협의체 구성('22년下)
 - * 복지부·고용부·보훈처·국토부 및 건보공단·심평원·근로복지공단·보훈의료공단·보험연구원 참여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공·사보험 연계법 입법 지원(필요시, 계속)
2/4분기	- 양부처 공동시행령 초안 마련
3/4분기	- 공·사보험 실태조사 추진방안 마련
4/4분기	- 의료보장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공사보험연계법 입법 완료 시 공동 시행령 제정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완화 및 국민의료비 절감
-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제도 중복 및 사각지대 완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강태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2 044-202-2684
------	------------------	-----	--------------------	------	------------------------------

3-3.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1. 과제 개요

-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역할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
 - * 예> 중증환자 중심의 심층진찰 강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반복하여 내원하는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조정 등
- (의뢰·회송) 적절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한 환자 의뢰, 대형병원의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환자 회송 등 강화
- (협력진료)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제공하고, 기관간 의뢰·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진료 수가 모형* 개발 추진('19년~)
 - *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환자의 진료 성과를 최적화하는 효율적 진료모형 및 묶음 수가 개발, 성과 인센티브 제공 등

2. 추진 경과

- (심층진찰) 상급종합병원을 처음 방문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내역을 반영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운영('17.12월~)
 - * (참여현황) 기관 25개, 진료과 17개(세부진료과 43개), 전문의 377명('21.12월)
 -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목적 연구 추진('21년上)
- (수가체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20.10월)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환자 진료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종별가산율 (30%→0%) 제외, 환자 본인부담율 조정*(60%→10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0월)

- 희귀·난치 질환자 진료를 위해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치료 결정 등을 수행하는 **다학제통합진료료 인상**
-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손실 보상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 상급종합병원 10% 인상, 종합병원과 병원 6% 인상
- (의뢰회송)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 및 회송 활성화**
 - (의뢰) 의뢰 내실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20.11월)
 - 내실있는 환자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진료정보와 영상정보가 교류되는 경우 수가 차등화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시 가산 적용
 - (회송)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정규 수가로 전환, 진료협력센터 전담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 차등(‘20.10월)
 - * (현재) 전담인력 3명 이상 → (개선) ①전담인력 6인 이상 or ②100병상당 1명 이상
 - (기관 확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제4기 지정 및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 추가 모집**(‘21.1월)
- (협력진료) 성과 중심, 지역사회 기반 자율적 **협력모델 연구**(‘19년)
 - * 지역사회 기반 자율적 협력진료 모형 개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9년)
 - ※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1년)
 - 심평원 급여제도연구실 주관 위탁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 중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심층진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향 (예: 시간제 진찰 등) 검토

- (성과보상)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 가능한 여건 마련과 이를 위한 적정 보상체계 수립('22년)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외래진료 감축 ▲협력기관 구성·운영 등 성과에 기반한 보상방안 적용
 -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2년上 기관 선정 및 준비, '22년下 본격 시행)
- (의뢰회송)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전문진료과목 의원간 의뢰* 등 다양한 진료의뢰 수가 적용('22년上)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환자가 다른 전문 진료과목의원으로 진료 의뢰 필요시 의뢰수가 인정
- (협력진료)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모델 개발 추진('21.4월~)
 -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 연구(1차년도) 결과를 토대로 건강관리 모델 시범모델 마련* 추진
 - *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적용 방안 2차 연구('22.3월~12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심층진찰) 수가모형 개선 검토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 (의뢰회송) 전문진료과목 의원간 의뢰수가 검토 - (협력진료)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적용 방안 2차 연구('22.3~12월)
2/4분기	- (심층진찰) 수가모형 개선 관련 전문가·의료계 논의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자료점검 및 현장방문 - (의뢰회송) 전문진료과목 의원간 의뢰수가 검토 및 사업추진 - (협력진료)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적용 방안 2차 연구('22.3~12월)
3/4분기	- (심층진찰) 개선된 모형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계약 및 준비기간 부여 - (의뢰회송) 전문진료과목 의원간 의뢰수가 검토 및 사업추진 - (협력진료)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적용 방안 2차 연구('22.3~12월)
4/4분기	- (심층진찰) 선된 모형을 바탕으로 추진계획 건정심 보고 - (협력 네트워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의뢰회송) 전문진료과목 의원간 의뢰수가 적용 - (협력진료)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모델 적용 방안 2차 연구('22.3~12월),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 협력 강화 유도
-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촉진하여 환자 진료 성과를 최적화 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동시 확보
-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중심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질환 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의료공급모형 다양화 유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종규 과 장 장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45
------	----------------	-----	--------------------	------	------------------------------

1. 과제 개요

- (의료행위) 상대가치 개편 주기 중간에 항목 재분류 등 정기적인 급여 목록 정비 제도 도입(도입방안 마련 '19~'20년 → 재평가 실시 등 '21년~)
 - 대상 별로 순차적으로 의학적 타당성, 급여내용·수가의 적정성, 사용빈도 등을 재평가하고, 급여 수가 코드 체계 개편 병행
- (약제)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개선방안 마련 '19년 → 시범사업 '20년~)
 - *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
 -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 추진
 - *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
 -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 실시
 - *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
-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 가격조사, 평가방식 등 제도 재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개선방안 마련 '20년 → 단계적 이행 '21년~)
 - 전체 품목, 일괄 재평가를 선별 품목, 심층 평가로 개선하고, 적정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가격정보 수집체계 강화 병행('20년~)
 -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에 기반한 공급내역(가격정보 포함) 등 활용 추진

2. 추진 경과

- (의료행위) 행위 재평가를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하여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용역 실시('19.7월~'20.12월)
- (치료재료) 중재적시술용, 인공관절군 등 92품목 재평가* 완료('20.1월), 골유합 및 골고정용군, 비노생식기류 등 85품목 재평가** 완료('21.1월)
 - * 상한금액 조정(80품목), 중분류명 변경(10품목), 중분류 신설(2품목)
 - ** 상한금액 조정(60품목), 중분류명 변경(22품목), 중분류 신설(3품목)
- (약제) 종합 재평가 추진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설치('19.11월)
 -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 종합 재평가 대상 선정·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19.12월)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재평가 대상 선정·재평가('20.2월~7월) 및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전환('20.9월)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시행
 - 약가 가산제도 개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20.2월)
 -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약제(5개 성분*) 재평가 대상 선정·평가 실시('21.2월~11월) 및 고시 개정** 완료('21.12월)
 - * 비티스비니페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주사제 허가 자진취하로 평가제외, '21.7월)
 -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급여삭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비티스비니페라 급여범위 축소) 고시 개정·시행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의료행위)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에 따라 행위 재분류 진행 및 수술·처치 유형 행위 목록 정비를 위한 속성 세분화안 마련('22년下)

- 자문회의체 운영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논의 거쳐 관련 분류 개정 추진('22.12월)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시행
- 행위(수술·처치 유형) 분류 속성 세분화를 통한 분류체계 확장성 제고
 - * 사용빈도가 낮은 항목 삭제하되, 전문과목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정비
- (치료재료) 재평가 미 실시 정액수가 품목 가격 및 보상방식 개선, 치료재료 가격 적정 관리체계 마련 위한 외부 정보 연계 추진
 - (재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재평가 소위원회 등을 통한 재평가 실시 후 관련 고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추진(~12월)
 - *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치료재료 정액수가(아르곤프로브 등 5개 품목, '10년 등재) 사용실태조사('21년)결과를 반영하여 재평가 실시
 - (정보 연계) 식약처 의료기기 공급내역 수집·활용시스템 구축(지속)
 - * 의료기기 등급별 단계적 추진 4등급('21년)→3등급('22년)→2등급('23년)→1등급('24년)
- (약제) 기등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필요한 대상 선정 및 평가 실시(지속)
 - '22년 재평가 대상 선정 및 공청회 개최('20.12월 예정)
 - '22년 재평가 공고 및 실무검토 등 평가 실시('21.1~11월)
 - '22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고시 등 개정('21.12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의료행위) 행위 재분류 검토 및 속성 세분화 검토(1월~6월) -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공고 및 관련 업체 설명회(2~3월),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식약처) 공급내역 연계 협의(~3월)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및 공고(1~3월)
2/4분기	- (의료행위) 행위 재분류 검토 및 속성 세분화 검토(1월~6월) - (치료재료) 전문가 자문회의, 업체 간담회(4~6월), 재평가 소위원회(5~9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 공급내역 연계 시스템 구축(~9월) - (약제) 실무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평가 실시(4~6월)

구분	추진일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행위) 행위 재분류 결과 심의·의결 및 속성 세분화 검증(7월~11월) - (치료재료) 재평가 소위원회 회의(5~9월), (정보연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 공급내역 연계 시스템 구축(~9월) - (약제) 실무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평가 실시(7~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행위) 행위 재분류 결과 심의·의결 및 속성 세분화 검증(7월~11월), 급여 목록 정비안 마련(12월) - (치료재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 공급내역 연계, 업체 공급내역 보고 정보-요양기관 구입신고내역 비교·분석(~12월)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완료 및 고시 개정 등(10~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의료행위의 급여 등재 이후 의료현실 및 재정변화 등을 반영한 항목 재분류 및 재평가 등을 통한 조정 기전 확보
- 재평가를 통한 치료재료 품목군 분류 및 상한금액 조정 등으로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등재관리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필수 의약품 중심의 보장성 확대·강화 기반 마련

담당부서 (의료행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협조부서 (약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	양윤석 과 장 전하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50 044-202-2751
협조부서 (치료재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미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4
협조부서 (치료재료)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담당자	이상희 과 장 김희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20 044-202-2780

1. 과제 개요

- (사용량)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19년~)
 -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하여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19~'20년) 및 도입 추진('21년)
- (가격) 허가제도와 연계(식품의약품안전처)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 마련('19년)
 -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은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20년~)
- (약제 급여전략)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 *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

2. 추진 경과

- (사용량)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19.8월, '21.9월),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개선 연구('20.11월)
 - *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는 요양기관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해당 기관에게는 현지조사 면제 및 수진자 조회 유예 등의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가격)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방안 발표('19.3월)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편 관련 규정* 개정('20.2월)
 -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개정('20.2월)·시행('20.7월 및 '21.1월)
- (약제비 관리) 약제비 지출구조분석*('20.3월) 및 요양급여 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조의2, '20.10월)
 -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심평원, '19.10월 ~ '20.3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사용량)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심평원, '22.3~11월), 장려금 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심평원, '22.3~9월)

- (약제비 관리) 약제 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 검토 및 마련

-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 추진(계속)

- (가격)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 검토·마련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장려금제도-실거래가조사를 연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3월~) - (약제비)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 마련(계속) - (가격)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계속)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전문가 논의체계 구축 등을 통한 개선방향 설정, 의견 수렴(4월~) - (약제비)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 마련(계속) - (가격)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계속)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제도 개선 연구 결과 등을 통한 개선 방안 검토(계속) - (약제비)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 마련(계속) - (가격)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계속)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 제도 개선 연구 결과 등을 통한 개선 방안 검토(계속) - (약제비) 약제 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세부방안 마련(계속) - (가격) 약제군별 해외약가 비교 조정방안 검토 및 방안마련(계속)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약제비 지출 내용 및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및 보장성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	양윤석 과 장 황신자 사무관 최경호 사무관 전하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50 044-202-2753 044-202-2752 044-202-2751
------	----------------	-----	--	------	--

1. 과제 개요

- (부당청구) 자율점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효과분석 '20년 → 제도개선 '21년)
 - * 예> 환수 실적, 자율시정 준수율, 부당청구 및 현지조사 감소율 등 평가
- 심사체계 개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부당청구 유형을 정비하고, 거짓청구 등에 대한 계도 및 현지조사 강화 추진
-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재 조치 강화 검토
-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연구용역 '19년, 반영 검토 '20년)
- (불법개설) 사무장 병원의 체납 처분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 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

2. 추진 경과

<부당청구>

- (조사·처분 강화) 부당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조사 및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선('21.12월)
- (자율점검 대상 확대) 자율점검제 확대 운영 방안 마련('21.9월)
 - 착오청구 유형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연계,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불성실 자율점검기관 관리 강화
-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시스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연계 (464개소, '21년)
 - * 진료비 청구, 인력·시설·장비 등의 신고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심사업무 등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2011년 구축)

<불법개설>

- (법령개정) 불법개설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건강보험법령 개정, '20.6월)

* 부당이득징수금을 1년 이상, 1억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인적사항 공개

- (전담징수팀 운영) 건강보험공단에 전담부서 신설(징수부, '19.1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

* 50억 이상 체납자 별도로 재산추적,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담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부당청구>

-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현지조사 실시(연중) 및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는 자율점검 항목으로 연계('21년下)

* 심사 사후관리, 현지(서면)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해당 항목 선별

- (예방형 자율점검제)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에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21.10~'22.8월)

*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에게 1차 개선요청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

<불법개설>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및 징수 강화 지속 추진

-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비 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사전 예방교육, 고액체납자(50억 원 이상) 특별징수반 지속 운영

* 시스템 처리속도 단축(14일→7일) 및 AI분석 환경 구축을 통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등으로 행정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 강화

- 약국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 확대 실시

□ 세부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부당청구) 현지조사, 자율점검 지속 추진(연중),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및 징수강화(연중),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 개선(1월)
2/4분기	- (부당청구) 현지조사, 자율점검 지속 추진(연중),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계속)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및 징수강화(연중), 약국 행정조사(연중)
3/4분기	- (부당청구) 현지조사, 자율점검 지속 추진(연중), 단순·착오청구 항목 발굴,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 분석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및 징수강화(연중), 약국 사전 예방 홍보 실시(11월)
4/4분기	- (부당청구) 현지조사, 자율점검 지속 추진(연중), 단순·착오청구 항목 자율점검제 연계,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도입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및 징수강화(연중), 약국 행정조사(연중)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담당부서 (부당청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담당자	이상희 과 장 정상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70 044-202-2771
협조부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정금호 팀 장 변종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80 044-202-2481
	약무정책과	담당자	하태길 과 장 양대형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90 044-202-2486

3-4.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

1. 과제 개요

- (요양병원) 의학적 중증도에 적합하게 환자분류체계·수가수준을 개편하고,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 병행
 - 분류체계를 의학적 입원필요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환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분류군별 수가 및 본인부담체계 정비(~'20년)
 - * 단, 문제행동 등을 동반한 중증치매환자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의료중도 등으로 분류
 -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검토(~'21년)
 - 입원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세부처치 내역 수집 등을 거쳐 환자 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 조정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22년)
 - * 예> 요양병원별 기능이나 질병군별 별도 수가체계 마련, 기존 요양병원 내 사회적 입원 환자 퇴원 시 한시적 형태의 중간기관 모델 등
- (의료-복지 연계)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병원-시설 복합 모델 도입 검토('20년~)
 - 환자의 의료 및 돌봄 요구가 단일기관 또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는 새로운 통합 모델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고, 단계적 추진

2. 추진 경과

- 요양병원 수가 개편 Part I ('18.12월), Part II ('19.4월), Part III('19.11월, '21.1월) 건정심 의결, 순차적 시행

- (Part I)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의료인력(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 과밀병상(9인 병실) 수가 인하
- (Part II)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조정(7개→5개) 및 입원 일당 정액수가제 개선(중증↑, 경증·선택입원군 유지),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강화
- (Part III) 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가산율 조정 20%→18%, 8개 전문과목 전문의 → 전체 전문의)
 - 의사 1, 2등급 가산율 각 5%p씩 인하 및 적정성 평가 결과 우수기관·개선기관에 차등보상 지급('21.1월 건정심 의결, '23년 시행 예정)

- 요양병원을 돌아가며 장기입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 기준 개선 시행***(‘21.1월~)

* (현행) 퇴원 후 90일 내 동일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적용→
(개선) 퇴원 후 90일 이내 타 요양병원 입원기간 합산 적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항정신병제 적정 사용**을 위한 **지침서*** 마련

- 지침서 원본 및 핸드북 : E-book 게재 및 요양기관 배포

* 요양병원 입원노인환자 주요 항정신성 약물 사용 지침 관련 연구용역(‘21.3.~’21.9.)

- **요양병원 입원 중 산정특례 환자 위탁진료 산정방법 개선**

- **한방, 치과 진료내역 산정지침 개선**

- 요양병원 인증활동 및 질향상 유도하기 위한 **요양병원 인증평가 결과**를 수가 연계하여 **차등 적용**(‘21.10월~)

- 요양병원 인증 미신청, 조사거부, 인증결과 5점 미만 기관의 입원 인력 가산 수가 배제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요양병원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9인 이상 병실의 경우 입원료 30% 감산, 입원환자의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과밀병상에 대한 수가 제한 정책 추진

-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항정신병제 오남용 처방 문제 대응 지속

* ① 청구경향 분석 및 모니터링, ② 항정신병제를 DUR 서비스에 포함·관리 ③ ‘항정신병제 투약 안전’을 적정성 평가 지표로 포함 ④ 「요양병원 입원 노인환자 항정신병약물 사용지침서」 마련·배포(‘21.12월~)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 및 환류 기준 개선**으로 의료의 질 향상 유도('23.7월 시행)
 - * ① 의사인력 차등제 1·2등급의 가산율 5% 하향조정한 금액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②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구조와 진료부문 합산)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동안 각종 인력 가산 배제
- 요양병원 중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 연구 등 추진**
 - *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아급성기(Subacute) 환자 등을 주요 입원대상으로 하는 병원 등 다양한 형태 검토 예정
-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활동 유도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수가 개선 추진('22년下)
 - * 100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등 의무화
- (의료 - 복지 연계) ‘(가칭)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추진과 연계하여 **수가(환자평가료, 연계관리료 등) 및 운영체계(환자지원팀) 개선 방안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요양병원 9인실 이상 입원료 감산 적용, 「요양병원 입원 노인환자 항정신병약물 사용지침서」 마련·배포
2/4분기	-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관련 모니터링 - 요양병원 관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연구 추진
3/4분기	-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관련 모니터링
4/4분기	-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관련 모니터링,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필수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종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	----------------	-----	--------------------	------	------------------------------

1. 과제 개요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올바른 임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수가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19년~)하고,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 등 확대 검토
- (임종실) 임종환자 등의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20년)

2. 추진 경과

- (호스피스·완화의료) 「암관리법」 제정으로 호스피스 법적근거 마련('03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호스피스 개념 확대('17.8월)
 -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입원형 '09~'15.7월 가정형 '16~'20.9월) 후 정규 수가 전환, 자문형은 시범사업 진행 후 본사업 전환('22년)
 -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별도 모델 개발 없이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차용하여 시범사업 실시('16.9월~)
-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근거법령 마련('16.2월) 및 시행('18.2월)
 -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18.2~), 기관 선정기준 확대*('19.11월)
 - * 의학적 시술 가능기관 → 담당인력(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을 갖춘 기관 포함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본사업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1.11~) 및 관련 고시 개정('21.12)
- (임종실) 임종실 제한적 1인실 급여 확대 관련 자문회의('19.5월) 등 의료계 의견 수렴·검토
 - * 제한적 1인실 급여화를 기 추진한 감염, 화상 등과 달리 임종의 정의, 임종실의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외부의 요구도가 낮아 추가적인 수요 발생 시 재검토 예정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정규수가 적용 중인 입원형, 가정형은 체계적으로 운영·점검하고, 시범사업 중인 자문형은 정규수가 전환
 - (입원형·가정형) 본사업 지속 추진, 제도 이용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자문형) 정규수가 전환에 따른 모니터링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요양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임종돌봄모델 구축 추진
 -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2.1월 전환 예정인 정규수가 적용 후 체계적인 운영 및 모니터링('22.1분기~)
 - 시설 장비 완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제도 인프라 및 참여 의료기관 지속적 확대*
-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포함한 병원급 위주 의료기관 172개소('18.12월말) → 260개소('19.12월말) → 297개소('20.12월말) → 310개소('21.9월말) 참여 중 302개소 제도 참여 중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형·가정형) 본사업 지속 추진, 운영현황 점검 - (자문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 제도 인프라 및 수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형·가정형) 본사업 지속 추진, 운영현황 점검 - (자문형) 본사업 전환 이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수가 본사업 지속 추진 및 모니터링 · 제도 인프라 및 수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형·가정형) 본사업 지속 추진, 운영현황 점검 - (자문형) 본사업 전환 이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수가 본사업 지속 추진 및 모니터링 · 제도 인프라 및 수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구분	추진일정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형·가정형) 본사업 지속 추진, 운영현황 점검 - (자문형) 본사업 전환 이후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요양병원) 요양병원 임종돌봄 모델 수가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추진 - (연명의료) 연명의료 결정 수가 본사업 지속 추진 및 제도 인프라·참여기관 확대 · 모니터링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 마련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제도 기반 확충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윤민수 사무관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2 044-202-2733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담당자	노정훈 과 장 최단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70 044-202-2667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	한상균 과 장 김우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510 044-202-2517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담당자	성재경 과 장 정호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10 044-202-2615

4.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4-1. 공평한 보험료 부과

1. 과제 개요

- (적정성 평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소득 부과 강화 효과, 국민 수용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평가 실시('21년)
- (2단계 개편) 국회에서 합의된 2단계 개편안을 토대로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21년) 및 시행('22년)

2. 추진 경과

- 직장 - 지역 통합('00년) 이후 18년간 유지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저소득층 부담 과중, 형평성 문제 대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17.3월, 시행 '18.7.1일), '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중
- 부과체계 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이행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백서 발간('19.10월)
 - 부과체계 1단계 개편 효과를 점검·분석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실시('21년)를 위해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 추진('19.11~'20.9월)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적정성 평가 실시
 -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로 도출된 평가지표 및 평가틀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실시('20.12월~'21.6월)
 -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19.11~'20.9월)
 - 적정성 평가를 통해 1단계 개편 효과를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2단계 개편방안 마련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2단계 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22.1월~)

-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및 대상별·단계별 민원 대응체계 구축, 홍보계획 수립, 전산시스템 개선 등 사전 준비

- ① (법령)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 ② (시스템) 2단계 개편내용 적용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개발
- ③ (홍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정책 발표 전·후 유형별 맞춤형 홍보 추진

▶ (발표 전)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위성 등 집중홍보

▶ (발표 후) 부과체계 개편효과 등 SNS, 캠페인 통해 실제 사례 홍보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보험료 개편

-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행 500~1,200백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소득보험료 개편) 등급제 → 정률제로 개편하고, 최저보험료 인상

▶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인하 등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기준) 연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으로 기준금액 인하
-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화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을 현행 3천 4백만원 → 2천만원 초과로 강화

○ 2단계 개편 시행 및 모니터링(~'22.12월)

- (모니터링) 부과체계 개편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인식도 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Post 2단계 부과체계 이슈 검토 등 후속조치 이행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22.9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마련 - 2단계 개편내용 적용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개발
2/4분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마련 - 2단계 개편내용 적용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개발
3/4분기	- 2단계 개편 관련 유형별 맞춤형 홍보 추진 - 2단계 개편 시행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실시
4/4분기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영향 모니터링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확보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반 구축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웅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2
------	----------------	-----	--------------------	------	------------------------------

1. 과제 개요

- (조세제도와 연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예정대로 실시**(‘19년 과세 전환시 ’20.11월~)
-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프리랜서 등) 등 소득은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검토(‘19월~)

2. 추진 경과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위해 ‘분리과세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필요성 제기
- 소득의 성격과 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먼저 부과(‘20.11월~)
 -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 차관)에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심의의결 (‘20.8월)
 - ‘20년 11월부터 ’19년 귀속 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 소득(年 수입 1천만원 초과)에 건강보험료 부과
- 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年 수입 1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20.11월~) 추진상황 모니터링
 - 年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적정 기준선·부과시점 등 검토
- 비정형근로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정 부과 검토
 -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포럼실시(3회)
 - 비정형근로자 적정보험료 부과기반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1.5~11월) … 보사연, 조세연, 노동연 공동연구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年 수입 1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20.11월~)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기준 확대 검토(연중)
 -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 확대 시 적정 기준선·부과시점 등 검토
- 소득중심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분리·분류과세(금융투자소득 등) 부과 확대방안 검토(연중)
 - 심층 연구(분리·분류과세 중심) 연구용역 추진('21년上)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상황 모니터링(1~12월)
2/4분기	-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상황 모니터링(1~12월) - 소득중심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 연구(분리·분류과세 중심) 연구용역 실시
3/4분기	-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상황 모니터링(1~12월) - 소득중심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 연구(분리·분류과세 중심) 연구용역 완료
4/4분기	- 분리과세 금융소득 단계적 확대 및 일용근로소득 부과방안 검토(~12월) - 분리과세 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기준 확대 검토(~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여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2
------	-------	-----	--------------------	------	------------------------------

4-2.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1. 과제 개요

-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사회보험 간 정합성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시장 변화**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 소득 등 기준 사전 정비
 - * 징수통합의 효과성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 ** 예> 고소득 전문가(프리랜서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면서 높은 임금 수준과 짧은 근무시간을 갖는 경우(통역사·파트타임 물리치료사 등) 등
- (지역가입자 세대 기준) 보험료 부과 단위인 '세대' 인정 범위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주민등록세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비

2. 추진 경과

- 징수통합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19.9~12월)을 통해 4대보험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 (주요내용) 일용직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정비, 직장가입자의 보수 기준을 소득 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 등
- 타 사회보험과 동일하게 일용직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 개선('20년)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 강화('22년下)
 - 고소득·고재산가가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회피를 막기 위해
 - ▲연소득 기준 ▲재산 기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등 강화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편안>

- ▶ (연소득 기준) 소득 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 (재산 기준) 재산과표 5.4억 → 3.6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 (형제·자매 인정 기준) 소득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억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세부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피부양자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 확정
2/4분기	- 피부양자 기준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3/4분기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 강화 적용(계속)
4/4분기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피부양자 기준 강화 적용(계속)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건강보험 자격 기준 개선으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안정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6
------	----------------	-----	--------------------	------	------------------------------

1. 과제 개요

- 가입자 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부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보험료 경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20년)
 - 경감 대상별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변동 영향 분석, 소득·재산 기준 등 경감 요건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경감 기준 개선

2. 추진 경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경감제도의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19.1~6월)
 - * (주요내용) 경감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어촌 경감에 소득·재산 기준 도입,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경감제도 최소화 방안 등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보험료 경감 실시('18.1~'20.12월)
-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재난 지역 및 저소득계층 보험료 경감 실시('20.3~5월)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대상으로 월 건강보험료의 30~50% 한시적 경감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 등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경감 실시('20.11월~)
 - *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과세로 전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간 80%)간 40% 한시적 경감
-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21.12월~'22.11월)

-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 1년간 50%, 재산과표 500~1,350만원 한시적 공제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21.10월)

<국민인식도 조사 주요결과>

- ▶ (경감제도 인지도) "알고 있다" ('20년) 44.1% →('21년) 53.9%로 9.8%p 증가
- ▶ 대상자, 요건, 절차 등 기준결정 시 가장 우선적 고려 사항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경감률' 33.9% (가장 높음)
- ▶ 경감제도 운영 결정을 위한 방안
 -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 39.2% (가장 높음)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2.7월 시행)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이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①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

○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세대 부담완화 방안 마련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최저보험료 상향 등 제도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자 및 보험료가 인상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22.7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를 기준 마련 및 하위법령 개정 - 피부양자 탈락자 등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
2/4분기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관련 하위법령 개정
3/4분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 적용 -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적용
4/4분기	- 보험료 경감 원칙, 거버넌스, 경감제도 개선안 검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가입자 간 형평성 및 보험재정 안정화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안정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6
------	----------------	-----	--------------------	------	------------------------------

1. 과제 개요

- (저소득층 체납자) 연체율 등 납부 부담을 낮춰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의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19년)
 - 연체금 징수, 급여 제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간 합리적인 균형이 확보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최대 9%→5%), 결손처분 대상 선정시 노인·미성년자 등 가구 특성 고려 부과체계 개편 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 일괄 납부의무 해소 등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등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적극 대응('19년~)
 - * 체납기간 1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속하게 공개 절차 진행
 - * (현행) 체납기간 2년 경과 보험료 → (개선) 1년 경과 보험료

2. 추진 경과

- (저소득층)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율 상한선을 9% → 5%로 인하('19.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연체금 인하의 국민부담 경감 효과분석('21.9월) 결과 569억원 경감
 - * (건강) '19년 1,184억원 → '20년 615억원
 -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취소 기준완화를 통해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19.10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 (기준) 2회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 (개선) 5회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특별관리 대상 확대 → 전문직 종사자, 고액재산가 등 16개 유형 선정(1개 유형, 1만1천 세대 확대)
 - ※ 1개 유형(분리과세 부과자) 및 유망업종(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추가

- '21.10월 기준 1,250억 원 징수, 전년 동월 실적(1,129억 원)대비 10.7% ↑

< '21. 11. 10. 기준(단위: 세대, 억원,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세대수	62,184	65,369	69,710	70,820
체납액	1,265	1,350	1,524	1,707
징수액	986	1,068	1,185	1,250
징수율	77.9	79.1	77.8	73.2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저소득층) 체납자의 소득·미납빈도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 가능성을 예측하여 결손처분을 진행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체납 징수 진행

* 성별·연령·총소득·생계형 여부·미납빈도 등 7종 변수를 통해 체납자 유형 분류

- 체납자의 적정부담을 위해 결손 기준(現 연소득 100만원, 재산 450만원 이하) 조정 및 '고령층 연대납부의무 재검토' 등 제도개선 사항* 검토('22.12월)

* 고령층의 가구구성, 보험료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연대납부 필요성 및 대안 검토 등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외부기관 자료연계*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감축** 지속추진

* 연계 중인 외부기관자료 : 26개 기관, 34종('19년) → 28개 기관, 36종('20년)

** 징수율 : 99.6%('20) → 99.8%('21), 체납액(누적) : 4.94조 원('20) → 4.79조 원('21)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대상자 유형 발굴 및 대상 확대 - 결손 요건 등 합리적 결손제도 개선안 검토 -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3월): 인적사항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선정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대상자 목표징수율 부여, 체납처분 강화 등 집중 징수추진 - 인적사항 공개 예정자 사전안내 통지 - 저소득 고령층 연대납부의무 폐지 관련 연구용역 실시(~6월) - 결손처분 기준 적정성 관련 연구용역 실시(~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에 특화된 안내문 발송 등 징수 추진(7~11월) - 결손 기준 부합 대상자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리(7~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 대상자 징수 및 체납액 감축 실적 분석 및 피드백 - 인적사항 공개 사전안내대상자에 대한 징수 지속(7~11월) - 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12월):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확정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체납자 유형별 체계적 징수관리로 저소득층 부담완화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로 성실납부자와 보험료 납부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도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안정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6
------	----------------	-----	--------------------	------	------------------------------

1. 과제 개요

- (기본방향) 외국인 가입자 100만명 시대('17년. 92만)에 대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당연가입 등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대책('18.6월) 이행
 - 진료 목적 입국, 당연가입에 따른 체납 증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19년)
 - 인도적 체류허가자(법무부) 지역가입 허용, 취약계층(시설수용 아동 등) 부과기준 일부 보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 보호 강화('19년)
- (개선사항) 외국인의 가입 및 급여 이용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제도 개선 등 검토('20년~)
 - 외국 사례, 건강보험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자격기준, 보험료 부과·관리, 급여내용 등 전반을 포함

2. 추진 경과

- 국조실 합동 실태조사('18.2~3월),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대책 발표('18.6월) 및 법령 개정 등 사전준비 거쳐 대책 시행('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대책('18.6월) 주요 내용>

- ▶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시 임의가입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당연가입하도록 개선
- ▶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최저로 부과되 영주·결혼이민·난민·미성년자는 내국인 최저보험료 이상 부과
- ▶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부여, 체류심사 4회에도 체납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외국인 보험급여 이용·보험료 부담 등 모니터링 및 연구(2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를 통한 제도개선 효과분석, 개선사항 검토

* 1차 : '19.10월~'20.3월 / 2차 : '20.9~12월

- 내국인과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입국일 즉시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체류자격 추가(E-9, F-5), 섬·벽지 및 농어촌 거주 외국인 보험료 경감 적용('21.10월, 시행규칙·고시 개정)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고용법에 의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 영주(F-5):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원히 거주(永住)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통상 5년 이상 체류 + 소득요건 충족 시 부여)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외국인의 가입 및 급여 이용 실태 등 모니터링 결과 심층 분석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고,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면적용('21.3월)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가입자 수, ▲급여이용 현황·민원 사례 분석 등 다각도 모니터링 실시

< 외국인 등 건강보험 가입 현황 >

(‘21년 1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총 계	외국인				재외국민			
		계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계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2021.11	1,262,576	1,235,340	479,500	195,320	560,520	27,236	10,866	6,569	9,801
2020.12	1,209,409	1,182,341	492,012	195,423	494,906	27,068	10,236	6,616	10,216

-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재정수지 등 운영성과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가입 자격, 보험료 부과기준 및 취약계층 경감기준 등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 축소에 따른 제도 수용성 위한 홍보(1~3월)
2/4분기	- 외국인 가입, 급여 이용 등 현황 모니터링 결과 분석(4월)
3/4분기	- 분석 결과 토대 제도개선 과제 등 검토(계속)
4/4분기	- 분석 결과 토대 제도개선 과제 등 검토(계속)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사회보험으로서 내외국인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안정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6
------	----------------	-----	--------------------	------	------------------------------

4-3. 통계·정보 관리 강화

1. 과제 개요

- (원가 정립)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19년)
- (원가 수집) 신뢰성·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 확보
 - 원가와 보상 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 수집·분석('20년)
- (회계조사)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진료에 따른 원가 산출을 위해 회계조사 추진('19년~)
 - 합리적 원가 산출 범위 설정,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등 마련
 - 중장기적으로 회계조사를 위한 표준의료기관 선정방안 마련, 의료기관 유형별 조사방법론 개발 등과 함께 조사대상기관 지원방안 등 검토
- (원가 활용) 원가 자료는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 확대 추진('21년~)

2. 추진 경과

- (원가 정립) 비용 분석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비용자료 수집 조사표 설계, 분석 방법론 및 분석결과 검증('20.4월~'21.3월)

* 심평원, 신포괄수가 참여병원, 연구용역 기관 등 참여

- 공단 패널 구축 자료 검증과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21.10월~)

* 건정심 보고('21.3.),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1.4월)

- (원가수집·회계조사) 원가자료 수집체계 검토 및 관련 연구용역 실시('18~'21년)
 - *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방안 연구」('19.2~'20.1월)
 - 「비용기반 신포괄수가 모형 개선 연구(2차)」('20.3~'21.3월)
 -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18.6~'19.8월)
 - 「회계조사 모델마련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19.9~'20.11월)
- 비용자료 수집 조사표 설계하고 비용자료 수집('20.9월)
- 의료기관 비용자료 수집 및 검증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21.5~10월)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원가 정립)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목적에 맞는 원가자료 근거생산을 위한 계산 방법·기준 마련('22년上)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정례화된 결과 보고서 발간 등 위원회 운영 지원체계 구축
- (원가 수집) 회계연도별 안정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대표성 있는 패널 확보, 관리 방안 검토('22년下)
 - 의료기관 종별·유형별·지역별 등 대표성을 고려한 패널 선정 및 원가 패널기관 운영방안 마련 연구 추진
 - 자료제출 패널기관 대상 계산 결과 공유 시스템 고도화
- (원가 활용) 요양기관에 합리적 보상 지원을 위한 행위유형별 비용 분석 표준화 방안 검토('22년下)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회의(3월) - 패널기관 원가정보 공유 환경 및 분석 인프라 강화(1~12월) - 행위유형별 비용분석 표준화 방안 검토(1~12월) - 실폐괄수가 비용기반 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자료 활용 제고 방안 검토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회의(6월) - 패널기관 원가정보 공유 환경 및 분석 인프라 강화(1~12월) - 행위유형별 비용분석 표준화 방안 검토(1~12월) - 실폐괄수가 비용기반 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자료 활용 제고 방안 검토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회의(9월) - 패널 의료기관의 대표성 확보방안 연구용역(~9월) - 패널기관 원가정보 공유 환경 및 분석 인프라 강화(1~12월) - 행위유형별 비용분석 표준화 방안 검토(1~12월) - 실폐괄수가 비용기반 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자료 활용 제고 방안 검토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회의(12월) - 패널기관 원가정보 공유 환경 및 분석 인프라 강화(1~12월) - 행위유형별 비용분석 표준화 방안 검토(1~12월) - 실폐괄수가 비용기반 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자료 활용 제고 방안 검토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결과 산출로 객관성 확보 및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운영 기반 마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주관) (협조)	이중규 과장 조영대 사무관 윤민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044-202-2732
------	----------------	---------------------	------------------------------	------	--

1. 과제 개요

- (관리체계)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가칭)’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평가지표 관리(현황·이력, 발굴·도입·종료 등 생애주기), 평가자료 연계 및 수집·분석,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 정보화 구현(‘21년)
 - * 분류체계·표준설명서 개발(‘19년)→ 전산시스템 구축(‘20년)→ 운영 및 고도화(‘21년~)
- (활용) 적정성 평가부터 우선 적용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여타 평가제도로 단계적인 확산 추진(‘22년~)

2. 추진 경과

- 평가정보뱅크 구축을 위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마련(영역 13개*, 세부기준 134개)(‘19.12월)
 - * 지표유형, 의료 질 구성요소, 임상주제, 적정성평가 항목,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형태, 평가 대상인구, 평가 대상기관, 평가자료원, 지표 사용 현황, 평가 결과활용, 지표활용제도, 평가관리기관
-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따른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상세설명서 (전문가용, 국민용) 마련(‘20.10월)
- 분류체계 등을 반영하여 ‘평가정보뱅크’ 시스템 구축(~‘20.12월)
- 7개* 평가의 지표정보, 평가정보뱅크 시스템 탑재 완료(‘21.12월)
 - * 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평가, 난임 시술의료지정평가, 아동·분만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평가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21.12월)

- 국내 의료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평가정보 통합포털*
(‘가칭’ 국민의료 평가포털) 정보화 사업 추진(~’22년 下)
- 평가포털 구축,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SW 직접구매 등
- *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모든 의료질 평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 평가 제도 간 평가지표 등 평가 정보 연계 및 활용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국민의료 평가포털 웹(’22.5월) 및 모바일(’22.7월) 서비스 구축
 - 웹·모바일, 위치 기반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 등
- 평가정보뱅크에 요양기관 대상 6개 평가*의 지표 정보를 순차적**으로 등재(’22.12월)
 - * 의료기관인증평가, 수련환경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호스피스전문병원평가, 연구중심병원지정평가, 건강검진기관평가
 - ** (’22년) 2개 → (’23년) 3개 → (’24년) 2개
 - 요양기관 대상 평가지표 정보 공유로 유사·중복 평가지표 조정 등 평가제도 간 연계 및 평가포털 운영 기반 제공 등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복지부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평가제도 간 연계·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료 평가포털 웹사이트 구축(~5월) - 국민의료 평가포털 웹사이트 안정화 및 시범운영(6~8월) - 평가정보 통합관리 관련 2개 평가제도 지표정보 수집 및 분석(4~5월)

구분	추진일정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료 평가포털 모바일앱 구축(~7월) - 국민의료 평가포털 모바일앱 안정화 및 시범운영(7~8월) - 국민의료 평가포털(웹·모바일) 운영(9월~) - 2개 평가의 지표 상세설명서 작성 및 분류체계 검토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제도 간 유사·중복 지표 분석 및 공유 - 2개 평가의 평가지표 정보 평가정보뱅크 등재(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평가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의료기관 부담 감소 및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담당자	이상희 과 장 김희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70 044-202-2780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고형우 과 장 김성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20 044-202-2404

1. 과제 개요

- (산출방식) 지표의 정확도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기관 확대, 조기 산출 및 정책지표로서 타당성 검증 등 지속 개선
 - *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기관 지속 확대('19년~, 매년 100개소), 조사인력 확충('20년~), 지표 검증 및 개선('21년~) 등
- (보장률 지표) 정책수단, 이용자·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세분화('20년~)
 - * 예> 환자(연령·질환·소득계층), 진료, 공급자 등 유형 분류

2. 추진 경과

- (표본확대) 보장률 지표의 대표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본 확대
 - * '18년 1,800개 → '19년 2,100개 → '20년 2,200개 → '21년 2,300개
- (활용도 제고) 보장성 지표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연구 추진
 - *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19.8~10월, 보사연)
- (지표 다양화) 필수적 의료 관련 보장률, 대상자별 보장률, 중증 질환 보장률 등 지표 다양화(계속)

3. 2022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계층의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다양화* 지속 추진('22년下)
 - * 장애인 등급 개정에 따른 보장률 산출, 만성질환 보장률 등
- 표본 대표성 확대 및 표본 산출 체계 개선 추진('22년上)
 - ※ 진료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은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 자료의 연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202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계획 수립(1~2월) -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수집(2월~)
2/4분기	- 202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실시(2월~10월)
3/4분기	- 202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실시(2월~10월)
4/4분기	- 2021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11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장성 강화정책 성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	유정민 과 장 강태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80 044-202-2684
------	------------------	-----	--------------------	------	------------------------------

1. 과제 개요

- (빅데이터)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연계·공동활용 등 단계적 확대, 효율성, 완결성, 활용도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구축방안 검토
 - 포털, 분석센터 등 데이터 제공 인프라 공동활용, 협력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업모델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검토 및 구현('20년~)
 - 클라우드 기반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연계한 정보 연계·통합 등 빅데이터 운영·구축 개선방안 중장기 검토('21년~)
 - (신기술 적용)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ICT 기술의 적용 영역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최신 정보보안 체계를 적용한 심층 빅데이터 연구·분석 환경 제공
 - 건강관리, 자격관리, 건강위험 예측, 맞춤형 민원상담 등 적용 가능 영역을 선별하여 연구 및 개발 활성화
 - * 예> 영상정보 판독, 건강위험 예측 등에 인공지능 접목 등
 - 청구행태, 질병발생 양상, 진료비 발생 등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등 정책 지원 및 보험행정 적용 강화
- ※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준수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 관련 정책방향 및 사회적 논의, 법적 체계 및 정비 등과 연계해 추진

2. 추진 경과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1월)·시행('21.8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개념 및 활용 범위, 정보 결합 및 보호조치·벌칙규정 등 도입
-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20.9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결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보건의료 결합전문기관 결합 관련 공동 운영지침 확정('21.1월)
 - 복지부 주관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업진흥원)를 통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관련 공통 운영기준 마련
- AI 의료영상 판독·심사 지원시스템 개발 및 실증랩 구축('21.7월)
 - 신규 3개 질환*의 인공지능 활용 학습데이터(의료영상-레이블링) 구축(~'23년)
 - * 요관결석(CT), 어깨관절증(MRI), 슬관절염(X-ray) 의료영상 데이터 구축 추진
 - 의료영상 구축정보를 비식별화하여 AI 개발기업 등이 기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환경 구축
-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DB 신규 구축 등 개방 확대(~'21.11월)
 - 표본데이터셋 신규 구축 및 갱신*, 국민건강정보DB 최신화, 국가중점개방데이터(3종) 및 공공데이터 신규구축 등 확대 개방(60종)
 - * (공단) 표본코호트 2.2DB, 노인코호트 2.0DB, (심평원) '20년도 환자표본자료 등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이중 데이터 간 결합사례 추진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 향상 및 가명정보 결합제도 활용 확산
 - 결합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설명회 개최('22년下), 가명정보 결합제도 이용자 대상 빅데이터 큐레이팅 추진('22년~)
 - 신규 선도사례 발굴 및 「데이터결합 아이디어(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우수주제 발굴, 우수사례집 제작('22년下)

- (결합시스템 개선) 결합시스템 성능 개선 및 인프라 보강사업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지침 및 시스템에 반영('22년上)
 - * 결합시스템 이중이원화 구성, 원격분석 시스템 인프라 증설 등
 - ** 주요 제도개선안 : 사전결합률 확인, 모의 결합, 결합 대상 정보 추출 등
- (인프라 확충) 급증하는 데이터 개방·결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계정 및 분석센터 확대*('22년下)
 - * 맞춤형 연구DB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사용자 계정 증설,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추가 구축 및 기존 센터 좌석 증설 등
- (AI 이용 활성화) AI 의료영상 진료판독 시스템 및 실증랩 고도화
 - 신규 3개 질환 의료영상 데이터 추가 구축, 비식별 원본 영상 개방 및 추가 개방 질환 검토 등 의료영상 학습데이터 제공 확대 추진
 - 의료영상 활용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등 협업 강화, 의료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신규 도입 등 실증랩 인프라 확대
- (마이 데이터) 국민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진료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추진
 - 요양기관명, 주 상병명, 총 청구 진료비 등 개인의 활용 가치가 높고 개방이 가능한 제공항목 검토 및 즉시 열람시스템 구축
- (데이터 개방 확대) 수요가 높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표본 데이터셋 신규 구축 및 갱신, 추가 개방 공공데이터 발굴 추진
 - * 예> 장애인 코호트 DB, 1인가구 코호트 DB 등 표본연구 DB 추가 개발, 다빈도 학술연구 수요가 있는 환자표본자료 개발, 21년도 자료 구축 등
- (소통 강화) 데이터 활용 목표 명확화*,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공단 주관) 등 소통 강화
 - * 산업계의 민간투자연구 및 과학적 연구까지 정보제공 확대(상업적 활용은 제한)

□ 세부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결합제도 이용자 대상 빅데이터 큐레이팅 추진(1월~) - 국민 생활밀착형 결합사례 발굴 추진(1월~) - 개인 진료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추진(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사례 발굴을 위한 선도사례 추진, 개보위 2기 시범사례 추진(4월~) - 결합시스템 성능 개선 및 개보위 제도개선안 지침 반영(5월) - 신규 3개 질환 의료영상 추가 구축, 추가 질환 개방 검토(4~6월) - 개인 진료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수행(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례 및 선도사례 연구자 지원(위원회 운영, 추가 가명처리 및 반출지원 등) - 「데이터결합 아이디어(사례) 경진대회」 개최(8월) - 의료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신규 도입 등 의료영상 확대 개방 추진(7~9월) - 개인 진료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완료(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전문기관 설명회 개최, 선도 결합사례 추가 발굴(10월) - 감염성질환 및 예방접종 DB 등 표본데이터셋 신규 구축 및 갱신(10월) - 개인 진료정보 열람시스템 시범운영(12월) - 가명정보 결합제도 우수사례집 발간(12월) - 건강보험 빅데이터분석센터 구축 및 개방(~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보건의료 데이터기반 기술·산업 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데이터결합 활성화, 보건의료데이터 간의 연계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경제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1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데이터진흥과	담당자	방영식 과 장 정용락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940 044-202-2941

4-4.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1. 과제 개요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역할·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 추진
 -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방안 마련('19~'20년) 및 단계적 이행('21년~)
 - * 위원회 운영, 시범사업 관리, 상대가치기획단, 사후관리 등 지원
 - 위원회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심의·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 우선추진('19년)
- (전문위원회) 급여 결정(수가·본인부담 등)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유형·역할 및 기능 재정비**
 -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고유 특성을 감안하되, 위원회간 권한 및 관계 등을 법적 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와 연계해 검토('21년)

건강보험 전문위원회 현황

구분		전문평가	급여평가	약제평가
소속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설치근거		법령, 고시, 심평원규정	시행규칙, 고시, 운영규정	법, 고시, 심평원규정
기능·역할		행위·치료재료의 경제성·급여적정성 평가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등 평가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등 평가
위원	인원	300명 내외(회의 22명)	20명 이내	100명 이내(회의 19명)
	임명·위촉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심사평가원장
	임기	2년	2년	2년

- (재정운영위원회) 재정관리, 자금운용,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등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위원회 운영 내실화
 - 협상 당사자(의약단체-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정방식 등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선**(‘21년)
 - ※ 가입자·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결정

2. 추진 경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역할·책임성, 균형 기반의 개편안 지속 검토 중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구성('18.11월)하여 각 계(노사정)의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논의('19년~,계속)
- (전문위원회) 효율적 급여검토체계 개편안 등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기관 등 참여하여 예비급여 제도개선TF 구성·운영('18.11월~'19.5월)
 -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통합 운영 및 기능 정립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검토 방안 마련('19년 하)
 -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통합·운영, 예비급여 적합성 평가 등 수행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1.4월 시행)
- (재정운영위원회)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21년), 직역의 대표성을 고려하면서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전문가 등 교체(30명 중 8명 교체)
 - 요양급여비용 결정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1기 : '18.9~'19.2월, 2기 : '19.10월~'20.11월, 3기 : '21.4월~),
 - * 제도발전협의체 : 재정위 소위 위원을 중심으로 공급자 및 정부·공익대표 24명으로 구성
 - 이를 통해 '23년 환산지수 산출방식(SGR 모형)에 대한 단기 개편방안* 및 중장기 수가체계 개편방안** 검토('21.7월~)
 - * SGR 산출식 중 ▲의료물가지수 비중 가중치 자료를 기존 2차 상대가치 회계조사 자료 → 3차 상대가치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산출에 활용되는 진료비 자료를 14년치 → 최근 10년치로 조정
 - ** ▲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수가체계 개편방안, ▲ 환산지수 결정 구조 등 검토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위원회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 작성·공개 확대(이해관계자·건정심 위원 논의 후 시행)

< 위원회 회의록 공개 형태 비교 >

구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관련 법령 등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한국은행법 제24조	금융위원회법 제12조
공개 사항	회의결과 요지 토의내용X	토의·회의결과 위원명 식별 ○	토의·회의결과 위원명 식별X	토의·회의결과 위원명 식별X
공개 시기	회의 14일 이내	개최일 1년 이후	개최 후 4년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
기타	회의록 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금융시장 안정 영향 우려 운용위원회 의결 후 개최일 4년 이후 공개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 시 비공개 제출	개인 사생활 및 법인 영업상 비밀 침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내부검토 진행 중 등의 경우는 비공개

- (명확성) 안전 상정 기준 명확화를 위해 ▲의결/보고 안전, ▲대면/서면 심의, ▲재난 시 신속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연중)
- (전문성) 건정심 위원의 전문적 안전 검토 지원*를 위해 심평원에 지원팀 설치·운영(연중)
 - * 전문적 사안 심의 시 사전 충분한 자료 제공 등 실질적 의사결정 지원
- (위원 위촉) 건정심 기본 원칙(보험자 - 공급자 - 가입자 간 균형) 하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정심 위원 위촉('22.1월)

<재정운영위원회>

- 총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 상대가치 - 종별가산 등을 연계한 수가체계 개편 연구 추진(~'22.10월)
 -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 재정위 소위 위원, 공급자 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 (건정심) 투명성·명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1~12월) - (재정위)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수시)
2/4분기	- (건정심) 투명성·명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1~12월) - (재정위) 환산지수 결정 관련 의견 수렴(5월)
3/4분기	- (건정심) 투명성·명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1~12월) - (재정위)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견수렴(수시)
4/4분기	- (건정심) 투명성·명확성·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1~12월) - (재정위) 수가체계 개선방안 사회적 합의 추진(12월)

* 과제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체계화를 통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재정운영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환산지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수용성 제고

담당부서 (건정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2
담당부서 (재정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김웅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5
담당부서 (급여평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담당부서 (약제평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	양윤석 과 장 황신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50 044-202-2753
담당부서 (전문위)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담당자	노정훈 과 장 강민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670 044-202-2661

1. 과제 개요

- (협업체계)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간 협업 활성화 방안 수립('19년)
 - 정례 회의체(건강보험운영협의회(가칭)) 운영, 인력 및 정보교류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 검토
 - 기관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재정체계 개선 검토('19년~)
- * 예> 연구 발주, 데이터 활용, 국제협력 활동 등
- (운영체계)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검토('20년~)

2. 추진 경과

-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주요 사업추진 상황 상시 모니터링(연중)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 예산운용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건보공단 및 심평원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동력 제고
-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참여(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
- **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참여(수시 개최)
- 10대 중점관리과제* 선정·점검을 통한 각 기관별 업무중복 방지 예방 및 예산집행·사업추진의 효율화 도모
- * 예산 집행률, 신규사업, 외부 지적사업, 정책 및 환경 변화(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 연도별 중점관리 대상 과제 선정

<'2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0대 중점관리 과제>

- ① 연구용역 관리체계 마련, ② 홍보예산 적정 운영, ③ 국제협력 기능 재정립,
- ④ 정보화사업 효율적 운영, ⑤ 빅데이터 개선 방안, ⑥ 사옥신축 건립 개선,
- ⑦ 각종 위원회 수당 등 합리적 운영, ⑧ 인재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개선,
- ⑨ 경력자 일시 퇴직에 따른 인력관리방안 마련, ⑩ 기본경비 예산 적정관리

<'20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대 중점관리 과제>

- ① 교육연수원 건립, ② 의정부지원 사옥 신축, ③ 정보화사업, ④ 연구용역, ⑤ 국외출장, 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⑦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운영, ⑧ 적정성 평가 수행, ⑨ 코로나19 손실보상, ⑩ 본원 사옥 공간 재점검

- 양 기관 간 정보 연계 활성화(자료 공유) 협업체계 구축
 - 데이터 연계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연계 총괄·실무부서가 참여하는 '데이터 연계 협의체' 구성('21.3월) 및 데이터 연계* (~'21.12)
 - * (건강보험공단 제공) 수진자별 건강검진 데이터 등 7개 정보
(심사평가원 제공) 요양기관 의료자원 데이터 등 5개 정보
 - 협의체 정기 운영을 통해 필요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 연계 방안 논의 및 진행상황 공유(월 1회 개최)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예산 협업체계) 건보공단·심평원 양 기관 주요사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합리적 예산운영 도모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복지부-공단-심평원) 분기별 1회, '예산운용워킹그룹'(공단-심평원) 수시 개최로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점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 기관 중복 우려 및 대규모 사업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을 매년 재선정(1분기)하여 체계적·효율적 관리
 -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예산집행 적정성 확립을 위한 공통운영경비 집행점검 사례 공유(3분기) 및 예산편성 방향 등 협의·공유(4분기)
 - 각 과제별 양 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한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 등 상시 교류·협력 체계 구축·운영

- (자금운용) 건강보험 준비금('21.6월 기준 18.2조원) 운용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운용 성과 등 공개·공시 확대(연중)
- (데이터 공유) 자료 공유 등 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협의체' 정기 운영(월1회)을 통한 협업체계 유지, 기관 간 정보 연계 필요 정보 발굴 및 협력 지속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 운영(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협의체 운영 및 '23년 예산편성 방향 논의 • 중점관리 과제 선정 - 데이터연계 협의체 운영(월 1회)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 운영(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과제 관리방안 및 예산편성 주요 일정 논의 - 건강보험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5월) - 데이터연계 협의체 운영(월 1회)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 운영(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관리 과제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 데이터연계 협의체 운영(월 1회)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협의체 운영(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협의체 운영 성과 점검,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 방향 논의 - 건강보험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11월) - 데이터연계 협의체 운영(월 1회)

*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은 변동가능

4.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적정성 도모
- 양 기관 간 정보연계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관리 및 제도발전에 기여

담당부서 (예산운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박광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04
담당부서 (정보연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15

1. 과제 개요

- (양자 협력) 개도국 및 선진국의 정부 및 보험기관과의 국제협력 균형 확보 및 공동수행 활성화('19년~)
 - 개도국 대상 국제연수·정책컨설팅 등 프로그램, 선협국의 정보 수집, 정보 교류 및 제도 수출, 교육·연수, 기관 MOU 등
- (다자 협력) 필수 의약품·치료재료, 질 관리, 신의료 등재 등 중심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HC) 네트워크 참여 및 협업 강화('19년~)
 - 필수 의약품·치료재료 분야부터 공조를 위한 국제연대를 적극 구축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개발·진행 등 활성화
 - * 예> WHO 의약품과 백신 접근성 로드맵 2019~2023 프로젝트 참여 강화, 건강보험기관 간 국제연대 창설 등
 - OECD, WHO, UN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국제행사 활성화*
 - * 예> WHO 국가협력전략('19년~), WHO 총회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 개최 및 주요 회의 의제 관련 협력 강화('19년) 등
 - 강점 분야 별로 WHO 협력센터 지정·운영 추진
 - * 예> 건강보험공단: UHC 교육훈련 분야, 심사평가원: 질 관리 분야

2. 추진 경과

- 제72차 WHO '의약품 가격 투명성 제고' 관련 결의안 발의국 참여('19.5월)
- 건강보험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20.12월) 및 보건재정·인적역량 강화 분야 협업
- 월드뱅크 협력, 우크라이나 보건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 추진('21.3~7월)
-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및 7대 사회보험협의체 공동 사회보장 국제 심포지엄 개최('21.11월)
-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추진('21~'23년)

3. 2022년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국제기구협업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K-건강보험 국제사회 전파*,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 채널 운영 지속**

* 코로나 대응 사이버 보안 컨설팅(IDB 중남미, 21.10월~), 보험자병원 기능 및 빅데이터(WB 벨라루스, '22.2분기), 장기요양정책 컨설팅(IDB 멕시코, '22.3분기)

** 국제사회 K-건강보험 확산을 위한 아세안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 WHO 협력센터로서 정책지원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 WHO WPRO 주관 보건의료 혁신사례 공유 회의(연3회) 참여 및 국내 WHO 협력센터 기관 간 협력사업(일차의료 등) 추진

- 주요 국제기구 회의, 국제학회 참여 등 국제 공조 강화 및 건강보험 제도 네트워크 구축·개선 노력 지속

- (국제기구회의) OECD 질과 성과 작업반 회의, WHO PPRI 네트워크 국제회의 등 주요 국제기구 주관 회의체 참여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회의('22년上·下),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회의('22년上), WHO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네트워크('22년上·下), WHO 의약품 공정가격(fair pricing of medicines) 포럼('22년上), OECD 보건위원회('22년上·下)

- (국제학회·네트워크) 신약의 경제성 평가, 국제 환자 분류체계, 의료의 질 등 업무 관련 최신 국제동향 파악·자료수집

*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학회(ISPOR), 국제환자분류체계기구(PCSI) 컨퍼런스, 국제의료의질관리학회(ISQua) 등

- (국제행사 개최)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 연수과정 개최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구매 및 질 관리 분야 WHO 협력센터(CC) 운영(1월~) - 코로나 대응 사이버 보안 컨설팅(IDB 중남미, 1월) -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추진(1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병원 기능 및 빅데이터(WB 벨라루스, 4월) - ISSA ICT 컨퍼런스 참석(에스토니아, 5월)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참석(5월) - WHO PPRI 네트워크 컨퍼런스 참여(상반기, 미정) - WHO 의약품 공정 가격(fair pricing of medicines) 포럼 참석(5월 예정) -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회의 참석(5월 예정) - OECD 보건위원회 참석(6월) - 제19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6월) - 건강보험심사평가 국제심포지엄 개최(미정) - WHO 이사회 참석(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료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9월) - 장기요양정책 컨설팅(IDB 멕시코, 9월) - 건강보험심사평가 국제 연수과정 운영(미정)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A 세계사회보장포럼 참석(모로코, 10월~) -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참석(10월) - 국제 의료의 질 학회(ISQua) 참석(10월) - 국제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및 성과연구학회(ISPOR) 참석(11월) - WHO PPRI 네트워크 컨퍼런스 참여(미정) - OECD 보건위원회 참석(12월) - WHO 이사회 참석(12월) - 에콰도르 대상 중남미개발은행(IDB) 컨설팅 지원(미정)

*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4. 기대효과

-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홍보 및 국제위상 제고
-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제사회 연대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담당자	현수엽 과 장 이용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10 044-202-2715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담당자	이중규 과 장 조영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30 044-202-2733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담당자	양윤석 과 장 황신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750 044-202-2753

IV. 재정 투입 및 관리 방안

① 2022년도 재정투입 계획

-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 5년간('19~'23) 총 소요재정 41.6조원 중 '22년에 9조 9,977억원 투입(신규 재정 1조 3,934억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에 8조 1,441억원, 제1차 종합계획 이행은 1조 8,536억원 소요(누적기준)

(단위: 억 원)

	총 소요재정('19~'23)	'22년도 소요재정(누적) ('22년도 신규 재정)
총 계	415,842	99,977 (13,934)
보장성강화대책*('17~'22)	264,147('19~'22)	81,441 (5,905)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23)	64,569('19~'23)	18,536 (8,029)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총 투입재정('17~'22)은 306,164억원

② 2022년도 주요 재정 투입 분야

- 근골격계 MRI, 근골격·혈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확대 등 환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관리질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확대, 교육·상담 활성화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 및 지역 확대,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 확대
- 당뇨병 환자의 기기 적정 사용 및 질 관리 위한 행위수가 개선,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개선 추진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 강화

③ 재정관리 방안

- (수입 확충) '22년도 적정 보험료율 인상(1.89%), 정부지원 확대
(‘21년 대비 1조원 증액하여 10.5조원 확보)
- ‘23년 보험료율 적정 수준 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부지원
한시규정 및 지원 수준·방식 등에 대한 명확화 논의
- (지출 효율화) 요양병원 부적정 장기입원 억제 등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적정 의료공급 관리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불법 증대여·도용 등 자격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